

##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별 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족벌’ 기업 이마트 해고 노동자이자, 삼성의 산재 은폐와 노동 탄압에 맞서 온 단체 ‘반올림’을 이끌었던 이종란 활동가는 경찰에 연행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청와대의 변명은 너무나 공색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질 거라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지만 중국의 노동자들은 한국의 1970년대 같은 노동환경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광산 사고로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이명박은 그동안 자신의 ‘통치철학’이라며 입버릇처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탄압해 1천5백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을 잡아들이면서, 울 들어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하고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물과 의약품마저 공급하지 않은 채 살인 진압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이것이었다.

그런데 이건희는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고 ‘무도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쥐어짜 만든 4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한국 사회를 농락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이번 사면으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2007년 12월 당선하자마자 재벌들을 만난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이건희 1인 사면을 통해 ‘친서민’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임을 분명히 보여 줬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질서 확립

지난 12월 24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범죄자 이건희 대신 정당한 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용산 철거민, 촛불 양심수,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감옥에는 용산 철거민,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포함해 1백여 명의 양심

수가 수감돼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면 은커녕 법 규정에 따라 일정 형기만 채우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가석방에서조차 양심수들을 배제하고 있다.

사법부는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하고 파업 중인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한 경찰 책임자와 용역강패들은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

한 공무집행”이라며 그들의 범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얼마 전 쌍용차 공장 진압 작전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에게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된 조합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경찰특공대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두 번이나 실신했다.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힘없는 저항을 했던 것뿐인데 재판부는 공무집

행을 방해했다며 실형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특권층 범죄자들에게는 사면권을 이용해 면죄부를 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질서만 확립하는 노골적인 친재벌 정권이 1등 비리범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며 점점 더 자기 무덤을 깊숙이 파고 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용산참사 협상 타결

## 정부가 사과를 했지만 진상규명은 거부하다

2009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신을 병동고에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유가족과 용산법대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유족과 철거민의 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어”(용산법대위)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운찬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인(私人) 간의 문제라 나설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들의 대화 요구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1인 시위마저 경찰력으로 짓밟았던 정부가 끈질긴 저항과 국민적 요구에 밀

려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사퇴시킨 사건 초기 저항 이후에도, “용산참사가 잊혀질까 봐 두려웠지만, 도와주는 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유가족 권명숙 씨)는 유가족의 말처럼 사람들은 용산참사를 잊지 않았다.

교수, 종교인, 노동자, 대학생,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가 나서서 용산참사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친서민’ 쇼를 벌이던 이명박에게 사람들은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내각의 주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용산참사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 번번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원죄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용산국민법정’에 무려 2만 5천 명(예초 목



2009년 12월 30일 용산참사 협상 타결 기자회견

표 1만 명)이 기소인으로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기독교대책회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사 현장에서 미사와 예배를 해 왔다. 크리스마스에는 무려 1천 명이 모여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지금도 선뜻 수십~수백만 원씩 익명의 후원금을 건네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다. 글, 영화, 영상, 연극, 그림, 춤과 노래 등을 통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연대도 계속돼 왔다.

이러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대중적 요구에 밀려 정부는 유가족에 사실상 사과하고 유가족과 용산 철거민들의 생계 보장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세종시와 4대강 논란, 아프가니스탄 파병, ‘공기업 선진화’ 등 첩첩산중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용산참사 문제까지 해를 넘겨서 끌고가는 것은 부

담이 컸을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참사에서 “남은 숙제는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검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아직도 죄 없는 철거민들이 ‘도심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김석기 등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용산참사가 이명박 살인정부에게 씻을 수 없는 원죄라는 사실도 변함없다.

건설사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모는 막가파식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또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낳은 이명박의 서민 짓밟기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용산 철거민들의 낯을 진정으로 달래는 길일 것이다.

김민숙 다함께 연대협력국



세상을 움직이는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바로 당신이요

“그때 말하면서도 속으로 부끄럽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

이명박이 대선 때 거짓말하던 심정 고백

“[여성들의] 자아 실현도 좋지만, 아이를 낳는 행복감을 모르기 때문... 어려울 때일수록 결혼도 빨리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언니네트워크가 꼽은 ‘2009년 꼬매고 싶은 입’ 1위

“양성 평등 한다고 하는데, 좀 저속한 말로 하면 개판 났다. 여성들이 애도 안 낳고, 이혼도 하고, 남편 말도 안 듣고, 가정도 안 돌본다”

민주당 서울시의원 홍광식, ‘2009년 꼬매고 싶은 입’ 대바늘상

“4대강 예산 22조 원 중 1조 원만 빼고, 나머지는 대학생 등록금 보조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자. 1조 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떡볶이를 사 주기 위해 쓰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인연삼십”  
사람의 얼굴을 한 삼의 마음, 환경연합이 꼽은 올해의 4자성어

“대부분 [이명박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자의 순서와 질문 내용까지 정해져 있다. 기자의 손 흔드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엑스트라 연기 내지는 퍼포먼스에 해당돼 ... ‘청와대 기자회견 놀이’란 제목의 한국판 연극인 셈”

MBC 신경민 전 앵커

“많은 사람들이 이전회 전 삼성 회장을 특별사면 하자고 한다. 왜 그래야 하냐고? 그냥 ‘세상 사람 모두가 기빠하는’ 크리스마스니깐”

우익 언론 (데일리안)의 기막힌 이견회 사면 논리

“BBK 사건이라던가 도곡동 땅 문제도 사실 냄새 찰떡 나는 오물을 흠으로 덮어쌌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 정권 퇴진 움직임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예리한 ‘법어’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 한나라당·민주당이 사이 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 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고된 일이었다.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UN이 신속한 파병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1년 동안 파병할 지역을 선정하고 부대를 편성해 당장이라도 파병할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파병 동의를 묻게 돼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추진하는 법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보더라도 UN이 파병의 정당성을 보충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UN 안전보장이사회



12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집회

가 승인한 다국적 군대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UN 건물에 무장 저항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UN 평화유지군(PKO)은 더

나을까? PKO가 파병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저지르는 아동 성학대, 살해, 부패 때문에 저항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아이티에서 발생한 식품 가격 폭등 항의 소요

에서 사람들이 외친 주된 구호 중 하나는 “UN군은 아이티를 떠나라”였다. 무차별적 폭력과 아동 성매매 때문에 PKO가 아이티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 법 덕분에 이명박 정부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미 집권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상비부대를 설치하겠다고 버르고 있었다. 사실 PKO를 파병한 나라들 중 상비부대를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이지 지독히 호전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정부다.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보다 43퍼센트 줄어든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도보다 49퍼센트나 늘었다. 후자는 이명박 정부가 군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된 지역들이다. UN의 표식을 달고 강대국의 침략과 점령을 도울 PKO 파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는 약 3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어 “중산서민층... 위한 사업에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나라당은 감세는 유보된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명박의 허풍과 달리 최근 내년 부자 예산이 크게 줄어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자 감세와 4대강 정책은 ‘민생’ 예산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총예산 안에서 예산 비중을 다루는 4대강 사업과 달리 부자 감세는 예산 자체를 줄게 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크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경제 위기 시기에 부자 감세는 결국 서민 증세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 그래도

턱없이 모자란 복지예산 증가율이 대폭 떨어졌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자 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그 대가를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멈춘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1조 5천억 원가량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투자 세액공제’ 규모도 당기 지출 금액의 20퍼센트(중소기업은 30퍼센트)나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 유보의 반대급부를 확실히 챙겨 준 것이다.

반대급부

또,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발표한 내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이상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0.5~2퍼센트고, 재산세는 0.1~0.4퍼센트다. 명백한 부자 감세다. 정부는 이미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했다.

반면,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 소비전력량 상위 10퍼센트 수준에서 과세한다지만 생필품에 해당하는 이들 제품의 소비세는

간접세 인상 효과가 있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의 조삼모사가 반복됐다. 실질적인 부자 감세·서민 증세 노선은 유지한 것이다.

경제 위기에 걸맞는 서민 복지를 하려

면 4대강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고 실질적인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 막아냈다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이 가소롭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든다



부당해고 항의 집회에서 발언하는 김승섭 사무국장

조명지

매서운 추위 속에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12월 28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김승섭 사무국장(사진)을 원직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섭 사무국장의 요구 조건을 1백 퍼센트 수용한 것이다. 김승섭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판교 현장에서 다시 일하게 됐다.

서해중합건설의 판교 건설 현장은 판교 신도시 건설 붐을 탄 소위 ‘대박’ 현장이다. 그러나 서해중합건설의 직영 노동자들에게는 일당 5만 5천 원 저임금

에 4대 보험도 없고, 유급 휴무도 한 달에 이틀밖에 안 되는 고된 일자리일 뿐이다. 김승섭 사무국장이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자 사측은 그가 혹시라도 투쟁을 조직할까 봐 우려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들어왔다” 하고 몰아붙여 해고한 것이다.

“원칙 있는 활동가”

김승섭 사무국장은 그간 건설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원칙을 굽히지 않는 고집 있는 활동가”로 알려져 왔다. 또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앞장서 왔고 각종 정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온 활동가이기도 하다. 사측은 이런 동지가 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김승섭 사무국장은 “직영 업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해고됐다가 싸워 복직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어떤 것도 후퇴하지 않았다. 한 달치 임금을 줄테니 투쟁을 그만두라는 제안도 있었고, 10개월만 일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양보 없이 싸워서 모두 따냈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현장 감독의 말 한마디면 밥줄을 놓아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김승섭 사무국장의 승리는 통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4대 보험 적용과 주1회 유급 휴가 준수를 약속 받은 만큼 판교 현장의 다른 노동자들도 같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례적으로 빠른 승리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연대 덕분이다. “단 1명의 해고에도 모두가 맞서 싸우자”는 건설노조의 호소로 지난 두 달간 분사 앞 시위를 했고 12월 22일 집회에는 무려 1백여 명이 모였다. 그러자 사측은 현장에서 바로 교섭을 제안했고, 첫 번째 교섭에서 백기를 든 것이다.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 이란에서 새로운 시위가 시작되다

리처드 시모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원이자  
Lenin's Tomb[레닌의 묘지] 블로그 운영자

불과 몇 달 전 일부 사람들은 이란의 개혁 운동을 ‘구찌 군중’의 운동, 즉 이란 상층계급의 운동으로 폄하했다. 그들은 패배한 대선 후보 무사비의 후원자가 신자유주의자이자 과거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이란 측 인사였던 라프산자니라는 점에 주목해 이 운동을 폄하했다. 그들은 이 운동이 과거의 이른바 ‘색깔 혁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배자들 내 신자유주의 분파들이 대중을 동원해 시위를 벌인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몇 번의 상징적인 시위를 벌인 뒤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다. 예컨대, 2005년 레바논의 ‘백향목 혁명’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당시 레바논의 부르주아지는 시리아 출신 하인들의 수행을 받으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이 시위를 찬양했다. 그러나 레바논 부르주아지의 행동은 곧 훨씬 더 규모가 큰 헤즈볼라 지지자들의 시위에 압도당했고 대중 운동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오늘날 이란의 운동을 이런 ‘색깔 혁명’과 비교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먼저, 친정부 민병대가 고문으로 얻은 일부 사람들의 ‘자백’을 제외하면 미국 정부가 이 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전무하다.

둘째, 이 운동이 단순히 ‘패관 부르주아지’의 반란에 불과하다고 규정할 이유가 없다. 아마디네자드는 이란 노동계급에게 해 준 것이 별로 없다. 더구나, ‘색깔 혁명’과 달리 이 운동은 일부 대도시 중심부에서 상징적 시위를 벌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항의 행동은 가난한 노동계급 거주지로 확산됐다. 설사, 이 운동이 중간계급에 한정된 운동이었을지라도 나는 이 운동을 지지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운동이 무사비나 그를 후원하는 자본가 분파를 옹호하는 행동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국가의 잔혹한 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해도 지속됐던 것이다. 얼마 전에는 ‘알쿠드스의 날’(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2009년 12월 27일 이란 개혁파 시위대

이란의 공휴일)에도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시위였는데, 거리의 시위대가 아마디네자드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훨씬 나은 동맹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 시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가장 정치적이고 선진적인 노동자 집단이 정부의 집중 공격을 받는 동안 학생들의 전투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이란 시위의 성격에 대한 논쟁에서 일부 사람들은 ‘학생’을 ‘중간계급’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란 혁명의 성과 중 하나는 고등교육의 폭발적 증대였고 대학 진학은 더는 특권층에 편중된 현상이 아니게 됐다. 사실, 유럽의 일부 대학생들의 급진화가 노동계급 출신 학생들의 유입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이란

학생들의 급진주의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가난한 출신 배경과 졸업 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전망과 연관돼 있을 것이다.

### 몰락하는 중동의 구질서

어쨌든, 이번에 아야톨라 몬타제리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죽었을 때 무언가 행동이 발생할 것은 분명했다. 물론, 몬타제리는 좌파가 아니다. 이슬람 혁명 초기에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주장했던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했지만 말이다. 동시에 그는 1980년대 이란 정부가 수감자 수 천 명을 처형한 것을 포함해 무자비한 정책을 펼칠 때, 이에 반대하고 이란공화국이 좀더 ‘인간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살만 루시디에

사형을 선고했던 파르와(이슬람법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에 반대했고 1990년대에는 개혁파 운동의 후원자가 됐다. 그는 특히 반동적 결정을 내리는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판했고, 그 때문에 가택에 연금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아마디네자드의 ‘재선’에 반대하는 파르와를 발표한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운동의 상징 중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단지 추모에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은 행동을 조직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시위대가 주요 거리를 완전히 장악했고, 몬타제리의 고향 나자파바드, 이스파한, 잔잔 등에서도 장례 행사를 막으려는 경찰에 맞서 싸웠다. 이란 정부는 늘 쓰던 수법으로 대응했다. <르몽드>의 보도

를 보면, 12월 27일에 시위대 8명이 죽고 3백 명이 다쳤다고 한다. 죽은 이 중 무사비의 조카가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이란 정부의 피의 학살이 운동을 잠재우지 못했는데 이번이라고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운동이 단순히 또 다른 ‘색깔 혁명’에 불과했다면 운동이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 이 운동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친미 정권에서 이란의 이슬람 정권까지 중동의 구질서는 몰락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현 이란 정부의 대안은 친미 정부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 이란 지배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선 최선의 전위라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란 개혁파들은 미국 정부의 부하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은 미국 정부가 이란을 제재하고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압력이 지속되는 한, 이란의 그 어떤 사회 계급이나 연합체도 더 좋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언제나 ‘발전’이나 ‘사회주의’의 미명 아래 대중을 억압하는 독재자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없다.

출처 Lenin's Tomb  
(http://leninology.blogspot.com)  
번역 김용욱 기자

\* 이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마르얌 포야, 책갈피)를 추천합니다.



추 / 천 / 도 / 서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마르얌 포야 지음, 정종수·차승일 옮김, 책갈피, 1만 2천 원

## 2010년 예산안은 고통 전가용 예산

연말 국회의 핵심 쟁점은 4대강 예산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과 노조법 개악안이었다. 건설 경기 부양과 거품 키우기를 위한 4대강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돼 있기에 관련 예산 통과가 사활적이었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짜 놓은 2010년 예산안과 고통 전가에 저항할 노조의 손발을 묶기 위한 노조법 개악안의 처리도 이명박 정부에겐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연말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신감 있게 ‘총공세’에 나설 수 없었다. 예산안과 노조법 개악안 통과도 버거운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은 2010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서두르지 말라”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새롭게 전선을 넓히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무너진 지지 기반, 강력한 반정부 여론과 저항 세력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날치기 전문 정당



2009년 12월 23일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라는 국민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삼정 예산을 밀어붙였다.

인 한나라당도 현재(12월 30일)까지는 쉽게 날치기 시도를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김형오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하고 총대 메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무능하고 비겁한 정치”를 한탄했다.

이번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임기 내

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며 4대강 예산안 통과에 매달렸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적했듯, 이것은 “철도 레일은 깔아 놓고 기차는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의 70퍼센트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 동요와 후퇴

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에 맞서는 중심축을 자처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은 불철저한 자세로 계속 동요하다가 결국 후퇴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저지한 흔적은 남기되 예산안을 불모로 잡았다는 정치적 부담은 지기 싫은’ 이중적 고민 속에 예결위 회의장을 접거하면서도 한나라당과 타협에 매달렸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전면 삭감에서 부분 삭감으로, 다시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안의 분리 처리로 거듭 후퇴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은 뒷걸음질치며 4대강 예산 에누리에 물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부분은 [진보정당·시민단체 등과] 입장을 달리 했었다”며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그 자체까지 부정할 순 없다”고 본심을 실토했다.

이처럼 다름 속에서도 타협을 향해 접

근하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9일에는 이명박의 기만적인 ‘녹색성장기본법’과 ‘PKO신속파병법’ 등 온갖 악법들을 사이좋게 합의 처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과 손잡고 4대강과 예산안, 노조법 개악 등을 막고자 했던 진보정당과 민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갈수록 실망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연말 국회는 결국 양당의 야합, 아니면 민주당의 거듭된 후퇴가 틈을 이용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마무리될 듯하다.

진보진영은 이번 경험에서, 민주당의 뒤를 쫓으며 협상에 매달려서는 이명박 정부의 개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반MB연합이 아니라 민주당과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그들의 불철저함과 배신을 폭로·비판해야 한다. 4대강,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노동조합 공격 등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정치적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전지윤 기자 ratm71@let21.com



#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12월 27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언론들이 어찌나 요란법석을 떨며 보도했는지, 이를 보고 있으면 “드디어 한국 경제에 희망이 비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일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핵 발전소는 ‘예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다. 이번 사업 예산이 역대 최고인 이유다. “핵은 값싼 전력”이라는 거짓말과 달리 천문학적인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핵 발전소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다. 입만 열면 ‘자유시장’을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핵 산업계는 이미 20조 원이 넘는 정부의 빚보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핵 발전소 건설과 유지에 쓰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희생시키며 충당돼 왔고 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핵은 청정에너지”라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만큼 지구와 후손을 위해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명박도 이미 지난해부터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풍력과 태양 발전이 아니라 핵 발전을 천명하 바 있다. 그러나 핵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핵 발전은 원자로만 갖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채굴과 추출, 운송과 가공, 원자료를 밀폐할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과 폐기물 저장소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포함하면 핵 발전은 풍력 발전보다 일곱 곱절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Energy Policy, 2008). 게다가 핵 발전소 예산이 많아질수록 풍력과 태양 발전에 쓰여야 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핵 발전을 둘러싼 세 번째 거짓말은 “핵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보수 언론의 거짓말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력 생산을 중단할 정도의 사고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40건 이상 있었다. 또 방사능 유출 확률이 “1백만 분의 1”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방사능 유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의 보증 없이는 어떤 사업자도 핵 발전소 건설에 나서



200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20주년을 맞아 벌인 핵 발전 반대 시위

지 않는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력도 1년 전 터키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져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

우라늄 채굴, 제련, 농축, 핵 연료 가공, 핵 발전소 가동, 폐기물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방사능 폐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지하에 보관해야 한다. 수십만 년은 인류가 구석기에서 오늘날 문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대부분 은폐돼 있다는 것이다.

### 〈한겨레〉입장 변화 유감

암과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방사선은 많은 양에 순간적으로 노출되면, 적은 양에 장기간 노출되면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런데 작업장에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이들은 대부분 방사선 노출에 의한 피해로 판정되지 않는다.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갑상선

암 증가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핵이 안전하다고 떠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핵 발전소 수출은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핵 발전소 수출 계획 자체가 국내에 핵 발전소를 확대하는 이명박 식 ‘녹색성장’ 계획의 핵심적 일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은 핵 발전소 20기가 가동중이고 12기를 추가로 짓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은 2030년까지 8~12기를 추가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수출을 계기로 더욱 탄력 받을 듯하다. 물론, 거기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렇게 국내에 추가로 생기는 핵 발전소는 위에서 말한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한국인들에게도 안겨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겨레〉가 “원전[핵발

전소] 수출이 달갑지 않”하던 올바른 입장(12월 28일치 사설)을 하루 만에 바꿔 “이미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다고(12월 29일치 사설)한 것은 유감이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역사를 돌아보면 외국 공사를 수주해서 받은 돈이 결코 자동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아랍에미리트 수주 실적과 자주 비교하는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1990~2005년)의 경우,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분식회계와 무리한 확장으로 부실을 키우다 1조 원이 넘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다시 그 돈을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상납하는 부패 추문이 폭로되면서 결국 파산했다.

수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동아건설에 일하던 6천여 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당했다. 동아건설과 함께 공사를 마쳤던 대한통운도 택배 기사들에게 건당 40원의 인건비 인상도 아까워서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이다. 이처럼 대형 공사를 수주한다 해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마치 고양이와 생선을 알아서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끝으로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른바 ‘국익’을 위해 정부 편에서 핵 발전의 안전화와 ‘한국의 기술력’을 편들 수 있을까? 핵 발전소 폐기를 요구하며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핵 폐기물과 기후변화 문제 모두에서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 한국 지배자들이 중동의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 꼴

최근 들어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뿐 아니라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도 핵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핵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핵 발전소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주요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이번에는 다른 중동 국가들

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중동 국가들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못 하도록 협정을 체결해 핵 발전소가 핵무기 개발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결국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UAE의 핵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발전소는 반대

하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은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 잣대’다. 미국 제국주의 압박이 중동 지역을 핵무기 개발 경쟁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뿐 아니라 이 위험천만한 경쟁에서 한몫 잡으려 혈안이 된 한국의 지배자들의 야심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를 보여 주다

본심

지난 12월 25일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룬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해 독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질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차관) 스즈키 간은 “영토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는 꼭 상대국을 배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문부과학상 가와바타 다쓰오는 “다케시마[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독도 명기를 뺀 것은 “보다 더 간결화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고교 해설서가 따른다는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 영유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해설서에 비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했다. 1백 년 전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현재의 영유권 주장도 제국주의적 야욕에서 비롯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더욱 노골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지배자들이 평화헌법으로 제약된 군사력을 경제력에 결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관계있다. 1990년대 장기 불황은 일본 주류 정치의 우경화를 낳았고, 이런 움직임

을 가속화했다. ‘테러와의 전쟁’은 일본이 이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우경화를 이끌었던 자민당의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우애와 공생’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올해 집권했지만,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하면서 학살을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지배계급의 일부인 민주당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을 근본에서는 바꾸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바뀔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된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집권 전에 중의원 선거 공약집에서 “우리 나라가 영토 주권을 갖고 있는 … 다케시마”라고 밝힌 바 있다.

### 몽그적거리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도 “크리스마스이자 연휴라 검토 중 … 휴일에는 대사를 초치한 관례가 없다”하고 몽그적거리더니 여론이 좋지 않자 부랴부랴 불러 ‘비공개’로 항의했다. 또 성명보다 낮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만 발표한 뒤로 잠잠하다.

지난해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시됐을 때는 주일한국대사 소환, 외교부 성명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등 목소리만 높이고 한 것이 없는데, 이제는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대응은 예상했던 바다. 이명박은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

부터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과거 문제는 묻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이명박을 비롯한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제대로 반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한국 자본은 일본에 의지해 성장했고, 현재도 일본은 한국의 수출 총액의 7퍼센트, 수입 총액의 1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다. 군사적으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은 계속 유지해 왔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정부 아래서도 변치 않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본질과 변변한 대응도 못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무력함을 잘 보여 준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자 비난 폭탄을 퍼부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김 교육감이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동아일보〉) 것이고 “‘10대 정치권’을 양산”(〈조선일보〉)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중앙일보〉)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김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무상급식이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책”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학교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면서 이를 거들었다.

또,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정치 중립’적이지 못한 무상급식과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김 교육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판지를 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세력의 탄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경기도 교육청 웹사이트에는 김 교육감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넘쳐 나고 있다.

아이디 ‘새롬’은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 것에 대해 전교조 시국선언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이 교과부를 공무방해 혐의로 맞고 발 했으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바라봅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꼭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 ‘이성호’는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체벌이 교육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겨냥해 그렇다면 “협박이나 고문 그리고 공갈도 학교에 허용하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통제 효과로는 [이것도] 좋다”고 비교했다.

한 청년은 자신도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료급식을 했”다며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조사를 할 때면 너무나 부끄러워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대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을 차별하는 일”이 된다고 “무상급식은 빈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고 말한다.

김상곤 교육감이 정부와 보수 세력의 탄압의 초점이 되면서, 경기도민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만을 품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도 얻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당신을 바라봅니다”하고 ‘절대 물러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은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비판한 김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을 주저앉히고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열망도 꺾어 버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김 교육감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일각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예컨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김진 교사는 〈참세상〉에 기고한 ‘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싫다’라는 글에서 “무상급식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이미지 상승에는 한몫을 단단히 했고, ... [학생인권조례는] 말이 좋지 학교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도 멀리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열광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한다. 김상곤 교육감이 보수 세력에게 공격 받는 이유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된 태도다.

진보진영은 김 교육감이 표적이 돼 공격 받는 상황에서 그를 방어하고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를 뚫고 진보적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청소년 기고

#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에 가슴이 뛰다”

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두발 규제는 물론 체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생인 나에겐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정치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며 설레발쳤고, 〈중앙일보〉는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고, 학생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했다. 게다가 “좌편향”된 교육지침 때문에 경기도 학생들이 걱정이라며 날 어이 없게 만들었다.

어쨌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일을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청소년

정치적 이념이라며 부정한다 말인가? 오히려 인권 조례가 “좌편향”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정치적 이념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 아닌가?

또한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친 듯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미성숙하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가했고 어떻게 미친소에 반대했으며 어떻게 촛불이 1백만이 되도록 만들었던 말인가?

‘학생인권조례’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 해도 아침마다 두발 단속을 하고 가방

을 뒤져서 핸드폰 검사를 하고 자를 갖고 다니며 치마 길이를 잰다. 어딜 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지금 같은 권위주의적인 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학생에게도 자기결정권과 참여를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틀 안에 가둬 둘 것인가?

나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상곤 교육감이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억압 받는 교육 제도 속에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김상곤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송조은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일제고사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는 교과부의 계획은 오히려 사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전체 고등학교 중 5분의 1이 ‘명문 학교’가 되고 전국의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줄 세워지면 고교 평준화는 사실상 무력해진다.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전면화하면 사교육 시장은 더 팽창할 수밖에 없다.

## 구조조정

영어 듣기 시험 비중을 50퍼센트로 늘리고 문항을 영어로 출제하겠다는 수능 시험 개편 계획도 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관련 강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한 반대에도 입법 과정조차 생략하고 교원평가제를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해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과밀한 학급, 교사들의 많은 수업시수와 과중한 잡무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입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 때문이다. 교과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교원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교원 평가는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정부가 ‘객관화한 지표’인 일제고사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면 교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교과부는 초·중·고 교원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교수 사회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 강화가 아니라, 전임교수 총원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교수 정원 확보율은 76.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는 대학 구조조정에 활용될 소지도 있다. 성과급을 적게 받는 교수가 많은 학과나 단과대는 통폐합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대학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법인화 이후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 비경제적인 학문 분야를 ‘정리’ 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대학평가인증시스템의 재정 지원 연계나 국립대학 법인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은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는 사실 [교육에] 불만이 많다”며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더 많이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교육에 투자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삶과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은 좌절돼야 한다.

조익진 서울교육대학교 학생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 사이에 통합 의제가 ‘돌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레디앙〉 2009년 12월 21일지)

확실히 진보정치대통합이 현실적 의제로 떠올랐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서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연합 제안이 ‘민주당 좋은 일 시기’로 끝난 것이 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진보정치대통합이 ‘돌출적’ 의제는 아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단결을 절실히 원한다. 정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통합노조를 건설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를 좌절시켰다. 분열해서는 격해지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런 단결 염원 때문에 진보정치대통합이 현실 의제가 됐던 것이다. 민주노총이 9월에 실시한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9.1퍼센트가 진보정당세력이 통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진보정당의 분열”이 “조직력 약화 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8년 초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당 지도자들에 의해 위로부터 추동됐다. 그러나 최근 진보정치대통합 논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레프트21〉은 노동자들의 진보정치대통합 염원을 무조건,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 그런 염원에 부응하려는 세력과 개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물론 진보정치대통합에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다. 부분적으로는 분열 경험에서 비롯한 구원(仇怨) 탓이다.

“당을 모욕하고 파괴한 분열주의자들에게 아무런 절차과정의 매개 없이 당선 가능성과도 무관한 ‘진보대연합’ 명분 때문에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지지까지 해야 하는가?”(이용대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

“분당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조건에서 덮어놓고 통합하자는 것은 분당을 명분 없는 분열로 치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진보신당 울산시당)

분열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지우는 것은 불공정할 것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을 이끌었던 양대 분파(자주파와 평등파) 모두



2009년 12월 19일 이명박 2년 규탄 민중대회 이명박 2년, 진보정치의 대통합은 “민중의 염원”이다.

분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분열의 책임 소재 파악이 먼저일 수는 없다. 그것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지자들의 통합 열망을 거부하려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이정희 의원이 잘 지적했듯이, 진보정치통합을 위해 “상대방에게 고해성사와 탈바꿈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너무 나아갔다. “민주당과 선거연합까지도 폭넓게 다 열어 놓”아야 한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 위원도 민주대연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늘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적어도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요컨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부에는 “독자성”(또는 “진보의 재구성”)을 앞세워 고립을 자초하는 경향과 무원칙한 단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물론 전자와 후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대 전 의장은 진보정치대통합이 “반 이명박·반한나라당 연합”의 장애물이라고 보고 반대한다. 사실, 민주대연합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돼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민주당의 집권 10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는 진보 인사들은 진보진영(특히, 민주노동당)이 왜 노무현 정부의 몰락을 진보적 대안을 발전시킬 기회로 삼지 못하고 쇠퇴와 분열을 하게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역사는 배우려 하지 않는 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법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과거를 ‘묻지 말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겠다는 것이다. 대중에게 민주당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배신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추미에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사이좋게 유엔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등등. 그래서 대중은 민주당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한편, 진보정치대통합에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민주대연합을 위한 구름판으로 삼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진보정치대통합의 정치적 목적 — 민주당 왼쪽에서 진보진영이 단결해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진에 이바지하기 — 을 망각

하는 것이고, 진보적 대중을 기만하는 알박한 책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극적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선거연합 전 통합 가시화’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노 대표는 애초 부분적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진보의 선거연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독자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지난 10월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의 결정보다는 반걸음 나아간 것이지만, 선거연합만으로는 부족하다(“독자성”을 이유로, 또는 “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을 내세워 이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겠지만 말이다).

민주노총이 12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이미 울산지역 보궐 선거를 통해 선거연합(후보 단일화) 방식으로는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진보신당 지도부의 (통합이 아닌) 선거연합 제안은 꾀감만 빼 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

는 것이다.

실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연합(선거구 조정을 통한 후보 단일화) 정도가 아니다. 대중은 통합을 요구한다. 통합은 어찌 됐든 간에 조직을 합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연합전선” 제안은 흥미를 끈다. “지금 진보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 무조건 통합론이 아니라 바로 이 연합전선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장 실장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합전선, 1990년대 이탈리아의 ‘올리브 동맹’, 우루과이의 확대전선 등을 연합전선의 사례로 든다. 그는 민주대연합을 강력하게 반대한다지만, 1980년대 프랑스의 경우는 급진당(전혀 급진적이지 않은 자본가 정당)이 포함된 민주대연합(역사적 용어로 ‘인민전선’)이었고, 집권한 ‘올리브 동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추진하다 베를루스코스에게 권좌를 내 줬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의 존재 이유를 확립하기 위한) “진보의 재구성” 주장자였던 장 실장이 “연합전선”을 제안한 것은 다소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통합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방식은 당 모델(정당법상 “신설 합당”)보다는 (진보정치대통합 구성 부문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공동전선적 모델이 통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이중 당적을 금지하는 정당법(“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의 제약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대통합 성사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주요 행위 주체들의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다. 두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강한 통합 압력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능동적이거나 진취적이지 못하다. 통합이 진보진영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은 그래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보정당의 분열 상황이 지속되는 한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적 주판알 튀기기만 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과오다.

김인식 kis@left21.com

서평 《진보의 미래》(노무현, 동녘출판사)

##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노무현의 메모와 녹음 파일을 풀어 만든 이 부실한 책은 유럽과 미국을 각각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이름 붙여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한 눈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애초에 이런 의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제3의 길을 ‘진보주의’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자신과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신자유주의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책의 절반가량을 할애한다. 시장과 경쟁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다면 분배·복지를 추구하면서도 규제 완화, 개방, 민영화 등은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 등이 일자리나 분배, 복지 문제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난센스다. 한국통신 민영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영화는 기업주와 부자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일자리 파괴와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악화로 분배와 복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를 잣대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면 복지와 분배가 잘 발달돼 있는 유럽의 제3의 길 정부들도 “신자유주의 보수 정권”이라고 불러야 하나며 항변한다. 그러나 이런 항변은 부질없다.

유럽 몇몇 나라들의 복지와 분배 정책은 ‘제3의 길’ 정부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3의 길’을 내세운 유럽 정부들은 말로는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복지와 분배 정책을 공격하고 후퇴시켜 왔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야말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원동력이자 신자유주의 정부의 공격을 막아낸 방패였다.

노무현은 개혁주의의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한다.

“진보주의에 어디 시장과 경쟁을 딱 반대하는 사람이, 딱 반대하는 논리가 있습니까? 특히 동유럽의 몰락 이후에 말이죠. 이견 정리된 거거든요. 시장을 반대하는 진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는 급진좌파들이 존재하며, 진보진영은 대체로 시장에 대한 규제·통제를 주장하고 경쟁의 폐해를 비판한다. 시장과 경쟁 논리에 단순히 굴복하는 것은 결코 ‘진보주의’일 수 없다.

###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

노무현은 자신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끝내 그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떠넘긴다. ‘보수의 시대’에 태어난 진보주의자로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감세안을 가지고 와서 밀어붙

였는데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아무도 방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와서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현재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을 장관에 기용해 그런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 자신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보다 ‘국회와 정당이 중요’하다지만 자신이 주도해 만든 열우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을 때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심지어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사람들과 무엇보다 탄핵에서 자신을 구출해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에만 관심을 보였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자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신을 비판하던 진보진영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너 잘못했다’

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 했노?’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한 것도 노동자들 탓이라고 비난한다.

“대책 없는 요구를 하고 대책 없이 싸우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고 안 들어주니까 이제 적대화되고, 결국은 김대중·노무현마저 노동조합하고는 적이 되고 말았으니 노조를 밀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자본가에 굴복해 개혁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천체국주의 정책으로 진보진영과 노동자·민중을 실망시킨 장본인이 그 책임을 진보적 반대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결국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이 들고 나온 노무현 식 ‘진보주의’는 시장과 제국주의(와 전쟁)에 굴복하는, 진보와 하등 관계없는 ‘사이비 개혁’일 뿐이다. 여기에는 “진보의 미래”가 없다.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 후폭풍

# ‘테러와의 전쟁’ 지속은 더 큰 테러 위험을 부를 것

크리스마스에 알카에다의 표적이 됐던 미국행 여객기에 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테러에 온건하게 대응한다’는 우파들의 압력 앞에서 이 사건을 ‘테러와의 전쟁’을 더 확대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2001년 9·11 테러 후 부시 정부가 그랬듯이 말이다.

테러 미수 사실이 밝혀진 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 주동자인 나이지리아인이 훈련 받은 곳이 예멘이고 이곳이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며, 미국 군대와 CIA가 예멘에서 1년여 동안 비밀 작전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인기 없는 사실 —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대 여론은 과반을 넘는 지 오래다 — 을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친절하게 알려 준 이유는 뻔하다. 현재의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또 다른 제국주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 해법

미국 정부는 예멘의 이웃인 소말리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 침략군이 쫓겨난 뒤 한동안 이 아프리카의 전략과 자원 요충지(‘아프리카의 뿔’과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개입 방법을 놓고



오바마, “끝까지 배후를 추적해 색출하겠다” 진정한 배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다.

고민해 왔다. 한국 해군을 포함해 주요국의 해군 파병을 고루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미국 정부의 예멘 개입 수준은 미국이 다른 두 전선(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사실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간접적 군사 개입은 이 지역민들의 고통을 가

중시킬 것이고, 무고한 미국 시민을 더 큰 테러 위험으로 내몰 것이다.

오바마가 진정 테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미국과 서방 정부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가 테러 행위를 그만두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아프리카 등에서 제국주의 개입을

중단하면 된다. 사실 예멘이 알카에다의 활동 근거지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부추긴 전쟁으로 소말리아인 10만여 명이 고향을 등지고 예멘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준

비중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왜 제동을 걸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미 예멘에서 무고한 한국인이 테러로 희생당한 바 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미 대통령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법’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오바마는 이를 “역사적 표결”이라고 추켜세우며 “건강보험 체계 개혁을 위한 1백 년에 걸친 투쟁이 거의 마무리됐다” 하고 의미를 뒀다.

진정 오바마가 약속한 ‘의료 개혁’은 달성된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민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보건 의료 체계 속에 고통받던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은 나아지는 것인가?

한때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하워드 딘의 주장을 들어 보자.

“건강보험에 대한 민영 보험사의 독점을 늘리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수백만 달러를 민영 기업 손에 쥐어 주는 조치가 진정한 의료 개혁일 수는 없다. ‘의료 개혁’의 혜택을 입는 국민은 2014년까지 거의 없을 것이고, 2014년이 되도 보험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번 ‘의료 개혁’의 승자는 보험업계다. 세금을 내고 사는 평범한 국민들은 지난번 AIG 사태 때처럼 앉아서 자기 돈을 잃게 생겼다.”

## 공공보험의 실종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의료 개혁법’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은 바로 ‘공공보험’의 실종이다. 오바마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 핵심은 공공보험을 도입해 기존 민영 보험과 경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공화당·보험업계와 거들거들 타협한 오바마는 공공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최종 법안에서는 이에 그 내용을 빼 버렸다. 이제 와 “공공보험 도입이 의료 개혁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변명해도 누더기가 된 ‘의료 개혁’의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

| PATIENT NAME                                                                                                                                                                                                                          |                      | ACCOUNT NO.               | TRIP NO. | INVOICE DATE |
|---------------------------------------------------------------------------------------------------------------------------------------------------------------------------------------------------------------------------------------|----------------------|---------------------------|----------|--------------|
|                                                                                                                                                                                                                                       |                      |                           |          | 10/01/2004   |
| DATE OF SERVICE                                                                                                                                                                                                                       | SERVICE FROM         | SERVICE TO                |          |              |
| 09/18/2004                                                                                                                                                                                                                            | 346 LEXINGTON ST-NEW | NEWTON WELLESLEY HOSPITAL |          |              |
| IMPORTANT MESSAGES                                                                                                                                                                                                                    |                      |                           |          |              |
| Please advise us of any medical insurance that may cover this service. If you do not have insurance, please remit payment in full. Please call our customer service department at 800-368-6629 if you have any questions<br>Thank you |                      |                           |          |              |

| CODE | DESCRIPTION    | UNITS | UNIT CHARGE | TOTAL CHARGE |
|------|----------------|-------|-------------|--------------|
| 1151 | ALS1 EMERGENCY | 1     | 475.00      | 475.00       |
| 2150 | ALS MILEAGE    | 2     | 15.50       | 31.00        |
| 5002 | IV THERAPY     | 1     | 160.00      | 160.00       |
|      |                |       |             |              |

|                  |                   |        |
|------------------|-------------------|--------|
| DIAGNOSIS: 81400 | TOTAL CHARGES DUE | 666.00 |
|------------------|-------------------|--------|

WE NOW ACCEPT THE FOLLOWING CREDIT CARDS:

구급차 사용료로 666달러(약 80만 원)가 나온 청구서 민영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오바마는 이 법으로 3천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4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민영 보험사는 이들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민영 보험사가 이들에게 청구할 보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신규 가입자들은 또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보장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상품에 말이다. 반면 민영 보험사는 정부에게서 보조금을 받는다.

또 이 법 때문에 민영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와 계약이 끝나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또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어서, 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의 최대 50퍼센트까지 더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 가입자의 경우 젊은이보다 최대 세 곱절까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인의 약 60퍼센트가 가입한 기존 직장 가입 건강보험의 보험료도 올라갈 예정이다. 오바마는 값비싼 보험 상품에 대

한 세금을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여가엔 대다수 정규직들이 가입한 건강보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낙태 시술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하원의원 데니스 쿠키니치는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보험업계가 새로 얻게 될 이익이 “매년 최소 7백억 달러(약 8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민영 보험사들의 힘만 더 강력해졌다”는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의 푸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의료 개혁법’이 상원을 통과한 뒤로 벌써 보험업·의료서비스업·계약금 관련 주가가 들쭉이고 있다. 의료 개혁 논쟁이 본격화한 올 하반기에만 관련 주식들은 20퍼센트 가까이 오른 상태다.

아프가니스탄 3만 명 증파 결정에 이은 오바마의 ‘의료 개혁 사기극’은 그를 통해 변화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 또 보수 양당이 지배하는 미국 정가의 기성 정치인으로서 오바마의 한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탄압에 반대한다

지난해 12월 25일 중국 법원은 ‘08현장’의 서명자 중 하나인 저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 류샤오보를 국가 반란죄로 11년 형에 처했다. ‘08현장’은 2008년 말 류샤오보를 포함해 중국 지식인 3백여 명이 서명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이다. 류샤오보는 과거에도 1989년 톈안먼 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류샤오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소신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데 반대해 그를 방어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중국 진보진영에서 이른바 ‘신좌파’(마오주의자들)로 불리는 사람들 중 일부는 류샤오보가 ‘신자유주의자’, 심지어 ‘미국의 앞잡이’라며 그를 방어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류샤오보는 자유주의자로 시장과 사유재산을 옹호한다. ‘08현장’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이것은 그와 선언문의 약점이다.

그러나 류샤오보가 탄압을 받는 것은 시장주의 정책 때문도, 미국 제국주의에 우호적이어서도 아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부야말로 민영화와 포함해 시장 개혁을 도입한 장본인 아닌가?

공산당 정부야말로 미국 정부와 갈등도 빚지만 미국 기업의 중국 노동자 착취 지원을 포함해 많은 문제에서 미국과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정부가 류샤오보를 탄압하는 것은 ‘08현장’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자의 파업권 등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중국 정부는 20년 전 톈안먼 광장의 대규모 저항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움직임을 강력히 탄압해 왔다. ‘08현장’에 지금까지 노동자를 포함해 1만여 명이 서명(인터넷 서명)한 것은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부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늘 취하는 위선적 행동에 불과하다. 이들은 얼마 전 자국 기업들이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신노동법의 도입에 ‘투자 회수’ 운운하며 날뛴 것에는 아무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류샤오보 석방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



# 21세기에도 노동계급은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사진: 장영환 기자

이 글은 **故 크리스 하먼**이 2009년 7월 **다함께가** 주최한 정보 포럼 '남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크리스 하먼은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좌파 이론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였고, 그 전 20여 년 동안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로 일했다. 올해 카이로에서 이집트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국내에 번역된 자서전은 대학생 단체들의 2009년 대학생 추천도서 50선에 꼽힌 《민중의 세계사》(해간파)를 비롯해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해간파, 공제),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김부래),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해간파), 《패배한 혁명 : 1918~1923년 독일》(홍우진) 등 10여 권이 있다. 미국의 유명 록밴드 RATM이 2집 앨범 《악의 제국(Evil Empire)》 재킷에서 《세계를 뒤흔든 1968》(해간파)을 포함한 크리스 하먼의 책들을 추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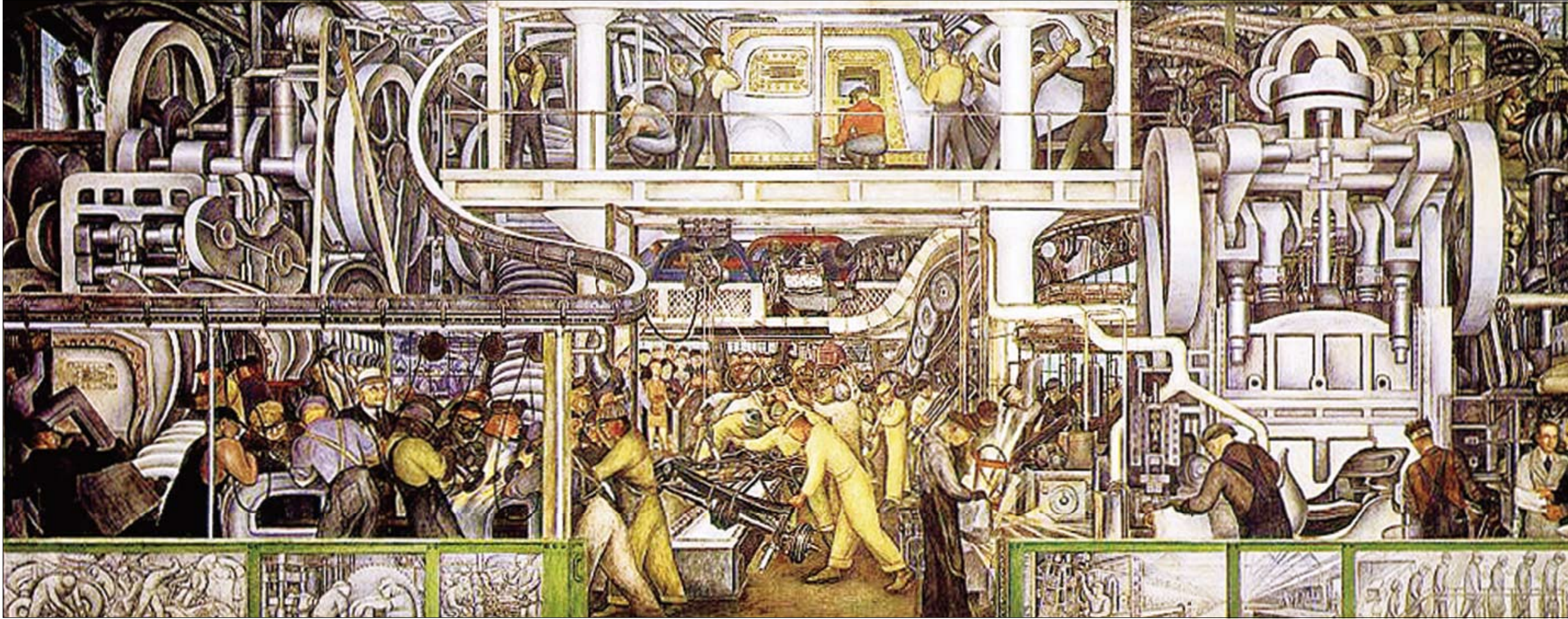
지난 1년 사이에 명백히 드러났듯이,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를 거듭해서 불러오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또한 전쟁을 양산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본주의는 기후 변화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한 세기만 더 지속되면 정말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어떻게 타도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를 타도할 주체가 누구냐'는 물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물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1백50년 전에 살았던 칼 마르크스에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자체가 자본주의를 종식시킬 거대한 계급을 만들어 낸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에 주목한 것은 노동계급이 딱히 고결하다거나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생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계급으로 끌어 모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수많은 농촌 인구를 도시의 공장, 사무실, 한민 등으로 끌어 모읍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계급사회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민으로서 착취당했습니다. 농민들은 각자 자기 땅에 묶여 있었고 서로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세계관은 매우 협소하고 국지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단합해서 집단행동을 하려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농민들은 글을 읽고 쓸 필요가 없었고 산수를 못해도 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피착취 계급을 만들어 냈습니다. 거대한 작업장에 집중돼 있는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집단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노동계급은 문자해독 능력이나 여타 지적·문화적 능력 면에서 과거의 어떤 피착취 계급보다 뛰어나며, 심지어 과거의 어떤 지배계급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자본가들 사이의 이윤 경쟁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압박하면서 노동계급의 동질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나 전쟁으로 치달을 때마다 노동자들은 옛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는 착취당하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을 독자적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착취에 맞서 저항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급으로서 자기 존재를 자각할 때, 그 계급을 대자적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계급이 사회의 대다수가 되고, 자본주의를 타도할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맞선 집단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가치관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된다고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 노동계급이 줄었다?

마르크스의 이 같은 관점은 항상 비판받아 왔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노동계급이 규모가 확대되기는커녕 축소됐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으로서 싸우기는커녕 저마다 혼자 싸우며, 자본주의 정신을



거대한 작업장에 집중된 노동자들의 처지를 묘사한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자동차의 외장재 최종 조립 라인인 생산 모습》 1932~33, 디트로이트 미술학교 벽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도 합니다. 불행히도 우파뿐 아니라 좌파 가운데 상당수도 이런 주장들을 수용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좌파들인 하트와 네그리가 노동계급은 더는 사회변혁의 주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노동계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회변혁세력으로서 예전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졌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제기할 첫 번째 반론은, 어떤 통계를 봐도 노동계급이 작아지고는커녕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데인 필머라는 학자가 15년 전쯤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방대한 통계학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노동력 규모가 25억 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4억 명이 생산직, 8억 명이 서비스직, 10억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의 노동력이 농업이 아닌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 전이었으면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예견한대로 자본주의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고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임금노동자로 만들어 세상을 바꾼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임금노동자는 아닙니다. 소수는 자영업자거나 열세 사업가들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도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일정한 임금 소득 없이 구두박이나 성냥팔이 등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이런 식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에서 임금 노동자 비중은 40퍼센트가 됩니다. 또한 오늘날 농업 인구 중 50퍼센트는 모종의 임금 노동을 병행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살기 위해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과반수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마르크스가 말한 독자적 노동계급의 규모가 20억 명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에 삶이 종속된 인구가 20억 명 더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서 중간계급 일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위 노동자, 트랙 기사, 쓰레기 수거원도 다 서비스 노동자입니다. 영국에서는 2000년도에 남성 노동자의 51퍼센트가 육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38퍼센트도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1840년대 섬유 공장 노동자나 오늘날 컴퓨터 공장 노동자나 똑같이 자기 회사에 이윤을 벌여 줘야 하는 압력에 시달립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한 또 하나 흔해 빠진 반론은,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산업 노동자들이었지만 오늘날 노동자들은 대부분 서비스 노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없는 주장입니다. 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은 서로 칼같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서 강통에 넣는 사람은 산업노동자인 반면 맥도날드에서 똑같은 패티를 빵 두 조각 사이에 끼워 넣는 사람은 서비스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햄버거 맛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영양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맥도날드 매장이나 공장이나 노동 환경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하던고, 땅이 뻘뻘 나고, 항상 긴장해야 하고, 지치고, 땀을 흘리는 혐오스럽고, 집에 오면 쓰레기 같은 TV 프로를 명하는 보는 것 외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 이윤을 불러 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자본 간 경쟁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맥도날드 직원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지점당 평균 80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 80명이 노조를 결성하면 80명을 고용하는 공장의 노조와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차이 운운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이 모두 중간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 이후 많은 직종들이 커다란 변천을 겪은 것 또한 사실 노동을 하는 직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리에서 중간계급 일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중간계급 직종이었다가 점차 노동 계급화한 것들입니다. 가령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 교사들은 38퍼센트도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의 50퍼센트는 육체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타이피스트나 비서 같은 하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자리는 고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천대와 멸시, 그리고 평생 일하는 것이 아무런 전망이 안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 이후 많은 직종들이 커다란 변천을 겪은 것 또한 사실 노동을 하는 직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리에서 중간계급 일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중간계급 직종이었다가 점차 노동 계급화한 것들입니다. 가령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 교사들은 38퍼센트도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의 50퍼센트는 육체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타이피스트나 비서 같은 하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자리는 고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천대와 멸시, 그리고 평생 일하는 것이 아무런 전망이 안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할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재생산하는 것이 자본주의 하에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 같은 재생산을 자본주의는 최대한 값싸게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공장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것과 똑같은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교사 월급에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능력을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점점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인구의 40퍼센트가 전통적인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20퍼센트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기껏해야 다음 세대 노동자들을 길러 내는 노동자 정도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7년 6월 23일 홈에버 상점의 파업 노동자들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다수는 노동자들.

가 노동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 바로 위에 존재하는 관리자 계층입니다. 관리자 또는 준(semi)관리자 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자본과 국가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통제·관리하는 대가로 일반 노동자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습니다.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들을 '신중간계급'이라 부릅니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파업 등이 없는 일상 시기에 대중매체는 이 신중간계급의 삶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기에 노동자들의 존재는 거의 잊혀집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6시까지 직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총퇴근 시간에는 잠시 그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시간대에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윤용 신중간계급 뿐입니다. 그러다가 계급투쟁이 분출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다수이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 노동계급은 싸울 능력을 잃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또 한 가지 신화가 있는데,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설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는 싸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제조업이 모두 중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 더는 노동계급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노동계급의 성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계 노동계급의 성장이라는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나라의 노동계급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09년 현재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것과 똑같은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교사 월급에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능력을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점점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인구의 40퍼센트가 전통적인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20퍼센트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기껏해야 다음 세대 노동자들을 길러 내는 노동자 정도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시중에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마도 중국에서 조립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부품은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중국산은 사지 않습니다. 미국산 보잉 항공기나 유럽산 에어버스를 살 것입니다. 한나라의 노동계급이 더 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을 논했을 때 그는 주로 섬유 노동자들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시대에 사람들은 '노동자' 하면 대개 금속 노동자나 탄광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에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전형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노동자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일 수도 있고, 자동차 공장 노동자일 수도 있고, 컴퓨터 회사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시설 하나가 통째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는 순간이동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이전하는 것은 언제나 공장을 이전했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어느 조사가 따르면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측에서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는 고작 열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무장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조금 전 개막식에서 탈라트 아흐메드

동지는 영국의 비스테온 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비스테온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을 때 사측에서는 '여차피 당신들이 만드는 물건을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스테온은 포드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부품 재고분의 반출을 막자 포드사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과 영국의 일부 좌파들은 모든 일자는 거의 잊혀집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6시까지 직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총퇴근 시간에는 잠시 그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시간대에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윤용 신중간계급 뿐입니다. 그러다가 계급투쟁이 분출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다수이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나타나는 그림은 결코 노동계급의 소멸 또는 약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노동계급의 모습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동계급의 규모가 변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썼을 당시 전 세계 노동계급보다 오늘날 한나라의 노동계급이 더 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을 논했을 때 그는 주로 섬유 노동자들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시대에 사람들은 '노동자' 하면 대개 금속 노동자나 탄광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에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전형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노동자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일 수도 있고, 자동차 공장 노동자일 수도 있고, 컴퓨터 회사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시설 하나가 통째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는 순간이동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이전하는 것은 언제나 공장을 이전했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어느 조사가 따르면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측에서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는 고작 열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무장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조금 전 개막식에서 탈라트 아흐메드

동지는 영국의 비스테온 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비스테온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을 때 사측에서는 '여차피 당신들이 만드는 물건을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스테온은 포드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부품 재고분의 반출을 막자 포드사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나머지 인구와 딱히 두드러지게 구별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노동계급이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는 계급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고 투쟁하는 자의식적 계급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성이 아무런 굴곡 없이 직선 코스로 발전해 온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소수의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이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시기에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존재에 눈뜨게 됩니다. 영국은 1840년대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든 소설가들이 노동계급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1차세계대전 무렵에도 그랬고, 196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1987년과 88년이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노동자 투쟁이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해결책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해결책으로 눈을 돌립니다. 노동계급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신념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사용자들은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낡은 산업은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무늬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뀐 무늬를 보고 노동계급이 사라졌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환상입니다. 자본은 이윤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이윤은 착취당하는 노동계급 없이는 획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투쟁의 상승기가 도래하면서 계급의식도 전 사

회로 확산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1960~70년대에도 세계적으로 거대한 투쟁의 파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로 끝나자 노동계급은 큰 자기 저하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좌파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일부는 노동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끌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온갖 이론들이 난무했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계급이 더는 의미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계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던 포스트모더니스트 지식인들도 요즘에는 대학에서 자기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동자로서 싸워야 하는 기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큼니다. 단지 전에 없던 새로운 집단들이 노동계급에 편입했기 때문에 과거의 노동계급과 달라 보이는 것뿐입니다. 새로 편입한 집단들도 21세기에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지키려면 노동계급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전통을 학습해야 합니다. 노동계급 내에서 소수인 혁명가들은 이 새로운 집단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그래, 당신들은 노동자가 맞고, 따라서 당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자본주의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막으려면 동료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막식에서 자동차 노동자, 언론 노동자, 그리고 교육 노동자가 함께 연단에 선 것은 매우 뜻 깊었습니다. 새로운 노동계

급의 전투성을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노동계급에는 그들 외에도 섬유 노동자, 극도로 가난한 여성 노동자, 극도의 악조건에 처한 수많은 다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계급 운동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운동을 조직할 시간과 능력과 열정이 좀더 남아도는 노동자들이 그들을 끌어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건설하려면 노동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동계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장은 노동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지배자들은 우리가 모두 중산층이라고 말하는데, 재밌게도 그들은 경제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기를 쓰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중산층’ 이하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 질의응답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주의적 해결책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논하자면 2시간은 족히 필요할 테니 짧막하게만 답하겠습니다. 온실 가스가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류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전 세계 지배자들이 알아차렸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어떤 수치를 보더라도 그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단일 자본이 아닌 다수의 상호 경쟁하는 자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책을 지지한다고 말하다가도 이윤에 타격이 될 거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대안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개별 기업들은 이윤을 벌어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기술이 이윤에 타격이 된다면 그들로서는 그것을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자본가들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나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가 절벽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싶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을 파괴하길 스스로 멈춘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보자면 이대로는 자본주의가 정말로 세상을 파괴하고 말 것이 뻔합니다.

기계화·자동화로 인해 노동계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마다 그 기계를 조작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공장들은 30년 전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냅니다. 그와 동시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들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그만큼 더 많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거의 컴퓨터만으로 가동되는 공장이 있다 해도 그 컴퓨터를 만들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읽고 쓸 줄 알고 수학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노동자들을 양성하려면 교사들이 그만큼 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값비싼 노동력이 병에 걸리더라도 하면 자본가들은 마치 기계를 수리하듯이 노동자들을 수리해 줄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이나 1백년 전보다 오늘날 기계



1987년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공돌이’에서 ‘노동자’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의식과 조직 모두 성장했다.

화가 훨씬 더 진척됐지만 노동계급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계급의식의 발전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노동계급과 계급의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영국 노동자들은 왜 귀족들과 왕실의 존재를 용인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로서도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모순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고 자란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을 체험한 적이 없고, 따라서

### 노동자들이

#### 투쟁에 동참하는 순간

#### 세상을 바꿀 힘이

#### 자신들에게 있음을

#### 자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애 대부분 동안은 자본주의적 사상을 수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자본주의 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당연시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또한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가며, 그러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상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 내에는 두 종류의 사상이 공존합니다. 한편에는 지배계급의 사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투쟁 속에서 발전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노동계급 전체에 퍼져 있지만 불균등한 배합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업장이나 지배계급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수가 있는가 하면 본능적으로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소수가 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사상도 일부 수용하고 반자본주의적 사상도 일부 수용합니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를 모순적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순적 의식이란, 기존 질서 내에서 자란 계급이 기존 질서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거기에 의문을 던지

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봉건제 후기의 부르주아지도 모순적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적 사상에 도전하는 한편, 자기 딸들을 봉건 귀족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도 자본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거기에 도전합니다. 유럽의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도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을 표방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합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때로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것 같아도 그들과 깊이 대화해 보면 거기에 면면히 흐르는 반자본주의적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본주의에 도전할 때는 집단적 해결책, 상호부조, 연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자본주의적 관념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오직 투쟁의 경험 속에서입니다. 투쟁에 당장 동참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은 얼핏 보기에 지배계급의 모든 사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하는 순간 단결과 연대와 호혜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당면한 투쟁에서 승리할 힘뿐 아니라 세상을 바꿀 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자본주의 전통은 노동계급에게 체화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 집단에게 균등하게 체화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노동자들의 혁명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혁명 조직을 만들려면 이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모든 일터에 존재하는, 본능적으로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소수를 규합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느 작업장이나 체제에 맞선 투쟁 본능이 있는 노동자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나 그런 학생들이 소수는 있습니다. 거대한 투쟁이 분출할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전진시키려 하는 거리의 지도자들로 떠오를 것입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투쟁에서는 항상 기존 질서를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들과 기존 질서의 틀 속에 운동을 가두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논쟁에서 자본주의 언론들은 항상 후자를 편들고 조직합니다. 영국에서는 오늘날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주요 영국 언론들은 이민자들을 속죄양 삼으려 합니다. 반면 우리는 산업 자본가들과 금융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영국의 모든 작업장에도 이민자들이 아니라 산

업 자본가들과 금융권이 경제 위기의 원흉임을 알고 있는 유럽계[비이민자] 영국인 노동자들이 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소수의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이민자들을 속죄양 삼는 주장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함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 책임론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고 자본가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책임이 자본가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공장 점거와 파업과 시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의 의식은 바뀝니다. 영국에서는 강력한 파업이 벌어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활짝 웃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교사들의 하루 파업이 있었는데 모든 교사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좌파적 구호를 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단 하루라도 뒷사람들에게서 해방된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사명은 그러한 자신감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해방감을 맛보았던 교사들도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면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체제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동료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각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논쟁을 벌여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부에 맞서 승리하고 언론노조도 승리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시대에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약간이라도 더 얻을 것입니다. 반면 자본가들로서는 자기들의 사상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쌍용차와 언론 노동자들이 패배한다면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노동자들은 더는 싸울 힘이 없다’는 등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결정적 패배를 당했을 때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수 년, 심지어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어느날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봉건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사오백 년이 걸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데는 사오백 년이나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류에겐 그만큼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차례 난관에 빠진다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난관 이후에 무엇이 올지는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월 1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원평가제 — 전략·전술적 관점이 필요하다

강동훈 씨가 쓴 <레프트21> 21호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에 이견이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혁명이나 혹은 그것에 준하는 거대한 투쟁과 맞물릴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생들과 처지가 또 다르다. 예를 들어 1987년 거대한 투쟁이 벌어져 대학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생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개입을 했을 때조차 중고등학교에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원평가 쟁점은 **투쟁의 전략·전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교원평가와 민주적 통제를 요구로 내걸고 싸우고 있다면 전술의 관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투쟁이 연대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두 집단 모두의 약점을 비판

하고 연대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와 교원 평가의 필요성은 단지 선전의 문제라는 것이다.(그런 면에서 강동훈 기자가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사례를 든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 벌어지고 있고 정규직 노동조합 지도부의 보수적 태도가 현실 투쟁에서 실제 문제기 때문이다.)

지금 핵심 대립 구도와 투쟁은 정부의 교원평가제 도입과 그것에 맞선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이다. 그렇다면 좌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게다가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공세에 맞선 교사들의 투쟁이 패배한다면 학교에서 역압이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동훈 씨는 “학생·학부모 들이 교사 평

가를 비롯한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사회 진보의 열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단지 선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내놓을 때는 때와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종파들을 제외한다면 침중팔구 “테러리즘”에도 반대할 것이다. 맑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광들이 “테러리즘”을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테러리즘”은 전쟁을 종식하는 효과적 수단이 아닐 뿐더러, 지배계급이 공세를 강화하는 발미를 제공하고, 대중을 하강계 여기는 영웅주의를 부추길 뿐이다. 그러나 이런 진보적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전쟁과 테러리즘 모두를 반대한다고 주장해야 하나? 핵심적 주장은 바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테러리즘을 비판하는 것은 선전의 문제다.

광야

##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폐지 투쟁’에 이어 2라운드에서 또다시 승리하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폐지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용역업체 재입찰 때 노동탄압으로 유명한 업체를 선택해 노동자들의 정년을 줄이고 고용 조건을 악화시키려 했다.<(레프트21) 온라인 기사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재돌입’ 참고> 게다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총무처를 찾아간 2백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원정인 학교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2월 22일 총무처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와 학생 들은 2박 3일 내내 농성에 계속 함께하며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에 고용 안정과 기존의 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종식 집회에 퇴근 후 집회에는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도 열의있게 연대했다. 방학임에도 학생 1백여 명이 함께 농성을 시작했고, 농성 내내 문과대·이과대·정경대 학생회, 고려

대 학생행진, 다함께 고려대 모임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겨울 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농성 중에 있었던 기자회견에는 ‘비운동권’으로 알려진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해 거의 모든 중앙운영위원들이 참가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학교를 규탄했다.

학교 당국은 농성에 연대해 함께 밤을 새는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고, 노동자들과 화약을 맺었던 이전 용역업체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학생들의 연대도 계속됐다. 결국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4일, 고려대 총무처는 여태 얼굴도 비추지 않던 용역업체를 불러 노동조합과 협상하게 했고, 그 자리에 총무과장을 입회시켰다.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년을 보장받았고, 식대도 공격받기 전의 상태를 보장받았다. 그리고 용역업체 수를 늘려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던 학교의 시도도 좌절됐다.

단호하게 농성을 진행한 노동자들과 방학임에도 연대를 건설했던 학생들이 다시 한 번 학교 당국의 공격을 막아냈다.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와 학생 들은 지난 2006년 출교 이후 처음으로 본관 농성을 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김준호 고려대학교 학생

### 정정 보도

2001년 9.11 직후부터 열의 있게 반전 운동에 참여했던 한 독자가 <레프트21> 21호 1면에 실린 ‘민주당의 정부 파병인 목인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에 나온 한국군 파병 기간과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 요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기사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2002년에 시작했다고 돼 있는데, 한국군 파병은 2001년 12월 18일에 시작했습니다. 또, 기사에는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을 파병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동의·다산 부대(아프가니스탄)와 자이툰 부대(이라크) 수로, 수송 지원단을 포함한 전체 파병군 수는 더 많았습니다.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한국군 부대 규모는 약 3백60명, 이라크는 약 3천7백 명입니다. (연인원이 아니라 군대 규모 기준으로) 기사의 핵심 논지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민주당 정부의 파병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 셈이 됐습니다. 독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조사해 지적해 주신 독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진보대연합 – 당 모델보다는 공동전선 모델이 통합에 더 효과적

<레프트21> 21호에 실린 독자편지에서 선영 독자가 지적한대로, 물론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연합 구성 부분의 해산을 전제하는 당 모델은 공동전선 모델보다 통합에 이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더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단적으로, 조직 해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모델은 안 된다’를 앞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통합 방식

을 조리 있게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 아닐까.

사실을 바로잡자면, 선영 독자가 언급한 독일의 다링케는 “특별한 종류의 공동전선”이 아니라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다. 선거대안과 민주사회당이 각각 해산 후 당으로 통합했다. 반면, 리스펙트는 정당적 요소를 적잖이 가미했지만, 구성 부분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연합체(coalition), 곧 “특별한 종류의 공동전선”이었다. 김인식

이화여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대회’를 보고

## 여성이 애 낳는 도구인가?

지난 18일 이화여대에서는 보건의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식 건강 증진대회’라는 해괴한 행사가 열렸다. 앞서 9일에는 성신여대에서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 콘서트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참여한 여학생들에게 ‘출산 서약’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는 적극적 출산과 낙태 방지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참여 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도 시원찮을 판에, 애 더 낳으라는 서약이나 시키다니 ... 많은 여학생들이 이 ‘쇼’를 보고 황당해 했다. ‘한식의 세계화’를 여성부장관의 자질로 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여성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내 준 사건이었다.

두 여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난달 이명

박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출산 서약’ 발상이 보여 주듯,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여성들 개개인의 잘못된 선택 문제로 돌린다.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서민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여성 노동자 중 70퍼센트가 비정규직, 전체의 5.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엄청난 교육비 부담은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이유다. 낙태방지 대책도 여성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것이고, 국가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정부는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척박한 현실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4대강 삼질에 쏟을 돈을 여성들에게 투자하도록 싸워야 한다.

김세란 이화여대 학생

## 기무사 마녀사냥 피해자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지난 8월, 기무사 요원이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 참가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폭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기무사 요원이 갖고 있던 동영상과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그의 가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명의 행적이 낱날이 기록돼 있었다.

사찰 피해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룬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기무사는 “민간인 조사도 군 관련 범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지난 11월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서 불법 사찰을 했던 기무사 요원을 폭행하고 수첩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안중현 학생은 자신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증인과 정황 등이 이

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오직 불법 사찰 당사자인 기무사 요원의 진술만으로 구속을 단행했다.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엉뚱하게 화살을 겨눈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속속들이 밝혀진 국정원 민간 사찰과 기무사 민간 사찰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마녀사냥이다.

안중현 학생은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광운대 부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사회 진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런 활동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지금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안중현 학생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기무사이고,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다.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성지현 대학생 다함께 활동가

###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오바마 취임 1년 — 오바마의 미국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1월 20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동부 여성회관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2-447-0397, 010-8439-0502

서울 서부 사회포럼  
**비정규직, 육아 전쟁, 성상폭화, 낙태 금지 논란 ... 왜 21세기에도 여성은 억압받는가?**

연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일시: 1월 14일 (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토즈 비즈센터 (신촌지하철역 8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문의: 02-324-3400, 010-7214-1157

##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http://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                                                                                                                                                                                         |                                                                                                                                                      |                                                                                                                                                  |
|-------------------------------------------------------------------------------------------------------------------------------|-----------------------------------------------------------------------------------------------------------------------------------------------------------------------------------------|------------------------------------------------------------------------------------------------------------------------------------------------------|--------------------------------------------------------------------------------------------------------------------------------------------------|
| <b>변혁적 신문과 대중운동</b><br>연사: 장호중 <(레프트21)기자><br>일시: 1월 6일 (수) 오후 4시 30분<br>장소: 연세대학교 용재관 203호<br>참가비: 2천 원<br>문의: 010-5678-8630 | <b>자본주의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질까?</b><br>연사: 선영 (다함께 활동가)<br>일시: 1월 20일 (수) 오후 4시 30분<br>장소: 중앙대학교 문과대 608호 (7호선 상도역, 1호선 노랑진역 1번 마을버스 중앙대 후문 정차 / 9호선 흑석역 500M)<br>참가비: 2천 원<br>문의: 010-5678-8630 | <b>장소: 연세대학교 용재관 203호</b><br>참가비: 2천 원<br>문의: 010-5678-8630                                                                                          | 과 학생)<br>일시: 2월 10일 (수) 오후 4시 30분<br>장소: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B208호 (7호선 상도역, 1호선 노랑진역 1번 마을버스 중앙대 후문 정차 / 9호선 흑석역 500M)<br>참가비: 2천 원<br>문의: 010-5678-8630 |
| <b>오바마 취임 1년 — 오바마의 미국은 얼마나 변화했는가?</b><br>연사: 정병호 (다함께 활동가)<br>일시: 1월 13일 (수) 오후 4시 30분<br>장소: 고려대학교 정경대 501호                 | <b>한국 여성 차별의 현실과 그 뿌리</b><br>연사: 김세란 (다함께 활동가)<br>일시: 1월 27일 (수) 오후 4시 30분                                                                                                              | <b>풍요 속의 빈곤 — 왜 21세기에 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까?</b><br>연사: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br>일시: 2월 3일 (수) 오후 4시 30분<br>장소: 고려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br>참가비: 2천 원<br>문의: 010-5678-8630 | <b>MB 집권 2년 — 평가와 전망</b><br>연사: 전지운 <(레프트21)기자, 다함께 운영위원><br>일시: 2월 25일 (목) 오후 4시 30분<br>장소: 고려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br>참가비: 2천 원<br>문의: 010-5678-8630 |
|                                                                                                                               |                                                                                                                                                                                         | <b>언론이 대중의식을 좌지우지하는가?</b><br>연사: 신동익 (다함께 활동가, 중앙대 신문방송학                                                                                             |                                                                                                                                                  |



한국 경제

# 붕괴는 피했지만 회복의 조짐은 없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세계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도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퍼센트 전후를 기록할 듯하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됐지만 대규모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정부들이 금융기관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함으로써 금융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하강 폭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대략 5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해 소비 감소를 막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해 경제 위기임에도 2009년 자동차 내수 판매는 2008년에 비해 16퍼센트가량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GDP 대비 8퍼센트대 성장 예상)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2009년 하반기 들어 다른 지역보다 더 나아졌다.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내구재 소비를 촉진했고, 중국 은행들은 9조 5천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신규 대출했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해 감절이 넘는 양이다. 그리고 대출 금액의 95퍼센트 이상이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국영기업 등 대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 증대와 내구재 소비 촉진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감소분을 줄여 줬다. 2009년 상반기 수출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22.8퍼센트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5.1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9년 연간 수출은 14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2008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감했으므로 2009년 하반기 수출 실적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큰 혜택을 봤다.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원화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에서도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그럭저럭 버틸 만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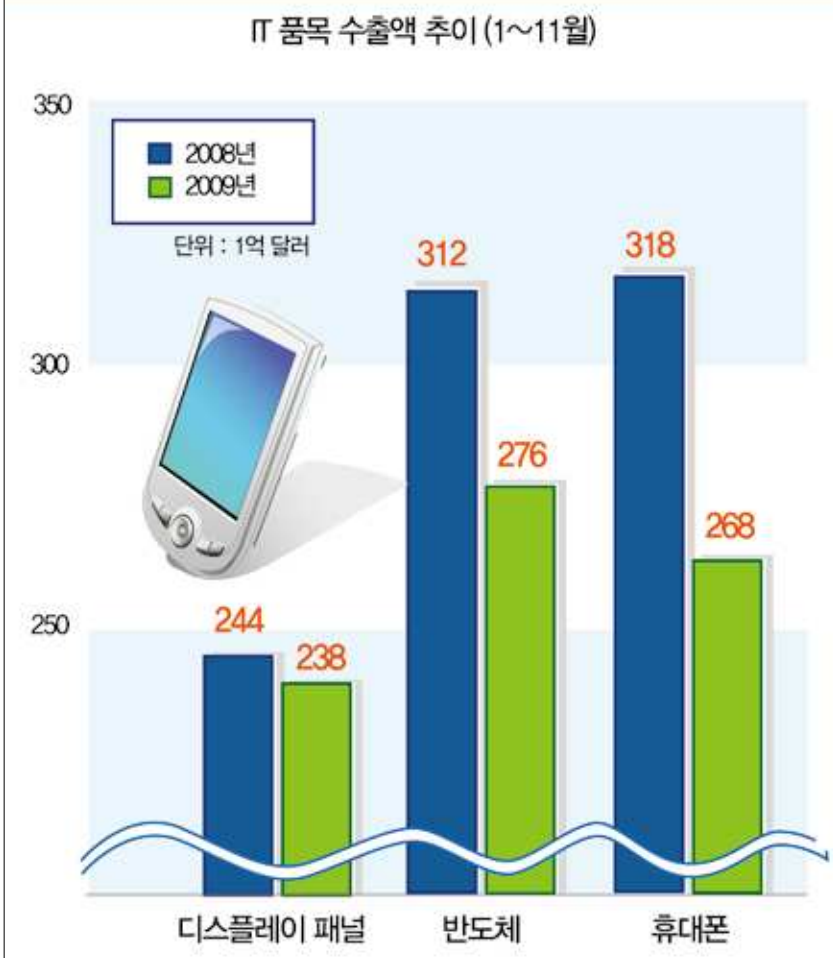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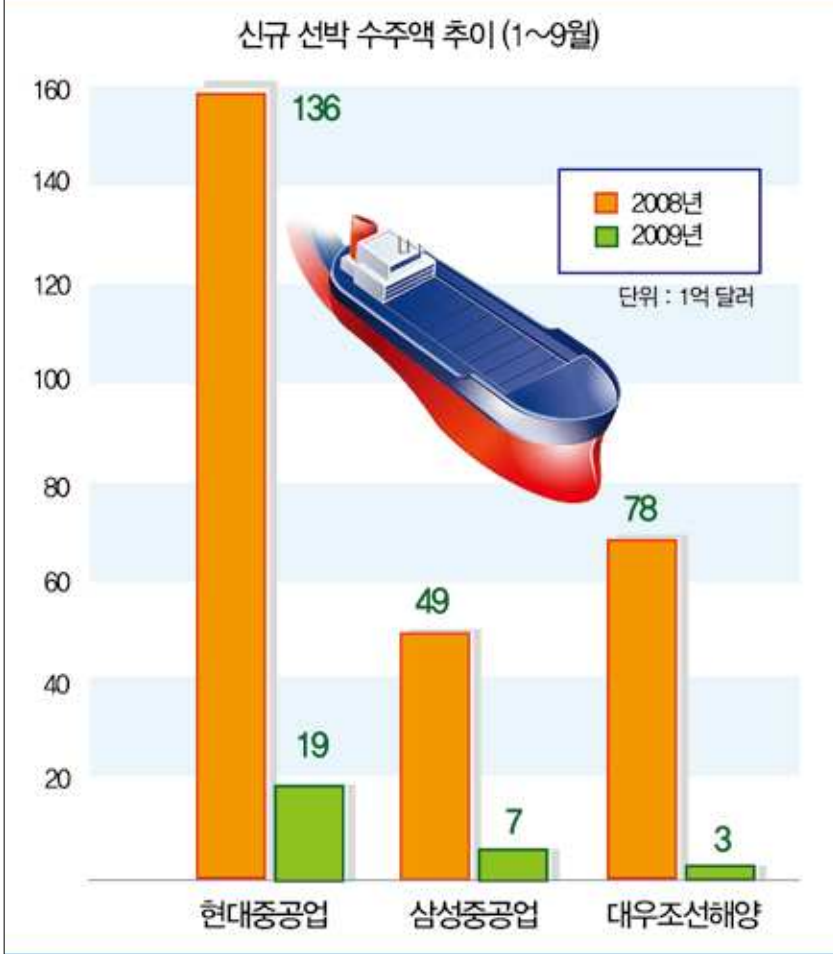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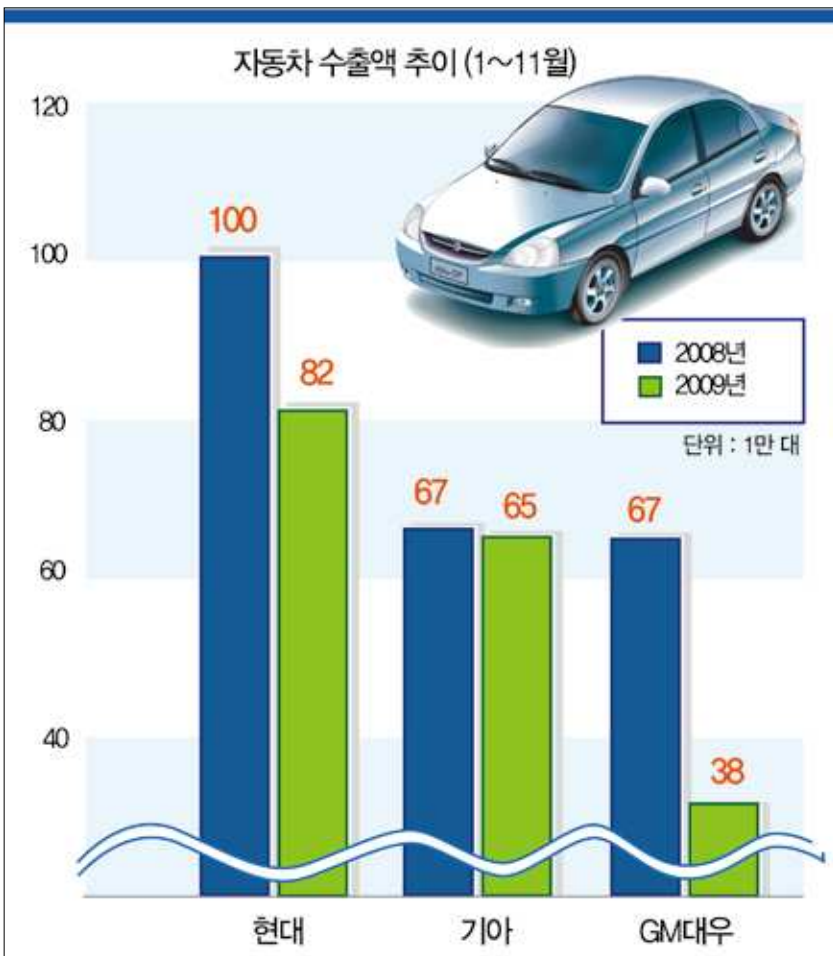
## 경기 부양과 국가 부채

IMF나 OECD 등은 2010년에 미국 경제가 2퍼센트 내외로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가 3퍼센트 성장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친기업적인 경제연구소들도 201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4~5퍼센트대로 전망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기대했다.

이들은 2009년의 선방이 정부의 경기부양책 덕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0년에는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조차 “5퍼센트 성장”은 그저 전망일 뿐이다. 97~99년에 그랬듯이 경제 위기 때의 전망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 지난달 KDI가 5.5퍼센트 전망을 내놓은 직후 두바이 사태가 터진 데서 알 수 있듯 세계경제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 하락이 멈췄지만 이번 경제 위기로 드러난 부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



계경제가 급속히 붕괴하지는 않더라도 경기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세계 각국이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해 국가 부도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올 들어 미국과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이 발행한 국제 규모는 3조 9천4백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1946년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발행량(53조 엔)이 세수(36조 9천억 엔)를 초과했다.

급증하는 국가 부채 때문에 미국·영국조차 몇 년 안에 현재의 최고 신용등급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고 무디스가 경고할 정도다.

두바이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유로 지역에서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부도 위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배자들은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응하려고 공무원 임금 삭감을 비롯해 교육비·연금 삭감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고 있고, 담뱃세·탄소세·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을 추진하는 등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공기업 선진화’와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공격, 공적보형료 인상, 연금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에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주요한 투쟁 사안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둘째, 전 세계 금융 부실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모기지 대출금보다 낮은 ‘갭투자’ 비중이 23퍼센트(1천70만 가구)에 달하고, 전체 주택의 7분의 1이 비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최근 대형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무제한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미국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호텔, 병원, 빌딩, 쇼핑몰 등) 가격은 정점에 비해 44퍼센트 넘게 하락해, 그동안 상업용 모기지 투자에 집중해 온 미국 중소은행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에 파산한 미국 은행이 1백 30개를 넘어서었는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은행 파산은 내년에도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FDIC의 예산을 50퍼센트 증액했다.

유럽 은행들은 경제 위기로 미국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다. EU 지역 국가들은 이미 금융권에 2조 달러를 투입해, 미국(7천억 달러)보다 많은 돈을 금융권에 투입한 상태다.

특히, 서유럽 은행들은 대규모 동유럽 대출로 큰 부실을 안고 있다. 최근 발칸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출해 온 오스트리아의 대형 은행 HGAA가 국유화한 것은 유럽 은행들의 위험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2010년에 유럽발 2차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 구조조정과 고용 전가

셋째, 세계 주요국에서 투자 부진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10퍼센트 정도 되는데, 2007년 12월부터 미국에서만 총 7백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과 파트타임 근무자를 포함

하면 미국의 10월 실질실업률은 17.5퍼센트”라고 보도했다. 2010년에도 세계 각국에서 실업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은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거품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보다 5.7퍼센트 상승해 2008년 7월 7퍼센트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대폭으로 뛰었고, 철강,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전자재 등의 부문은 과잉투자로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외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가 큰 한국 경제 특성상 2010년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수출이 급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주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해운·건설업체 상황은 매우 나쁘다.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미분양 등으로 고전하고 있고, 조선·해운업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해운업체 1위인 한진해운의 2009년 영업이익자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해운업체들의 부도는 이미 시작됐는데, 1백80여 해운사 중 이미 22곳이 폐업했고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업체가 4곳이다.

전 세계 해운업 위기로 조선업체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2008년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합계 4백억 달러가 넘는 물량을 수주했지만 2009년에는 간신히 40억 달러를 넘겼다. 제법 규모가 큰 중소 조선사 8곳 중 6곳이 긴급 지원, 워크아웃,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다.

조선·해운·건설업체들의 부도 위기는 고스란히 금융권에 타격을 줄 것이다. 조선업 관련 대출, 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에 들어간 은행권 자금이 70조 원에 이르고, 해운업에는 50조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보급차리주택 건설, 선박편도 조성 등으로 조선·해운·건설업 지원에 나서는데, 한편, 해운·조선 중소기업체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한편, 수출이 40퍼센트 넘게 감소하고 내수까지 10퍼센트 가까이 감소한 GM대우는 GM 본사나 산업은행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2010년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동부·유진·두산·애경·금호 등 위기 직전에 대규모 투자를 벌인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도 큰 편이다.

2010년에 조선·해운·건설업과 위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노동자 해고가 급증할 수 있다. 이는 2009년에 자영업 부문에서 특히 일자리 감소가 많았던 상황과 다른 것이다. 이런 변화로 2010년에는 격렬한 노동조합 투쟁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한편, 급증하는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지킬 수 있는 요구들을 제시하는 것이 2010년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 ‘테러와의 전쟁’ 과 파키스탄의 위기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황폐해졌고, 그 밖의 여러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끔찍한 분쟁의 악순환을 낳았고, 세계 곳곳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지금 ‘테러와의 전쟁’으로 가장 위협받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2008년에 파키스탄 북서쪽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을 무인폭격기가 거의 50번이나 폭격해 4백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정부는 위기에 처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유리 프라사드가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피비린내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지난달 [2009년 11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패배가 파키스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8년이 지난 뒤에 돌아켜 보니, 파키스탄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운함을 기울여 노력했다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9·11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왜 아무도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지도 체포하지도 못했으며, 왜 아무도 알카에다의 2인자 자와히리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까?”

이 연설을 들은 파키스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실 그런 물음에 답해야 하는 자들은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온 나토(NATO) 회원국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키스탄 지배자들도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서방 국가들이 “테러리스트”로 여긴 사람들을 아만적으로 공격하는 데 가담하면서 말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영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군대가 남부 와지리스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이며 소수 종족이 거주하는 산악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3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파키스탄탈레반운동(TTP, 이른바 파키스탄 탈레반)의 기지 아래 느슨하게 뭉친 조직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이슬람주의 세력화에 대한 지지가 확산된 것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과 경제 위기에 대한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자국 정부와 미국에 맞서 싸웠고, 때로는 부유한 지주들과 싸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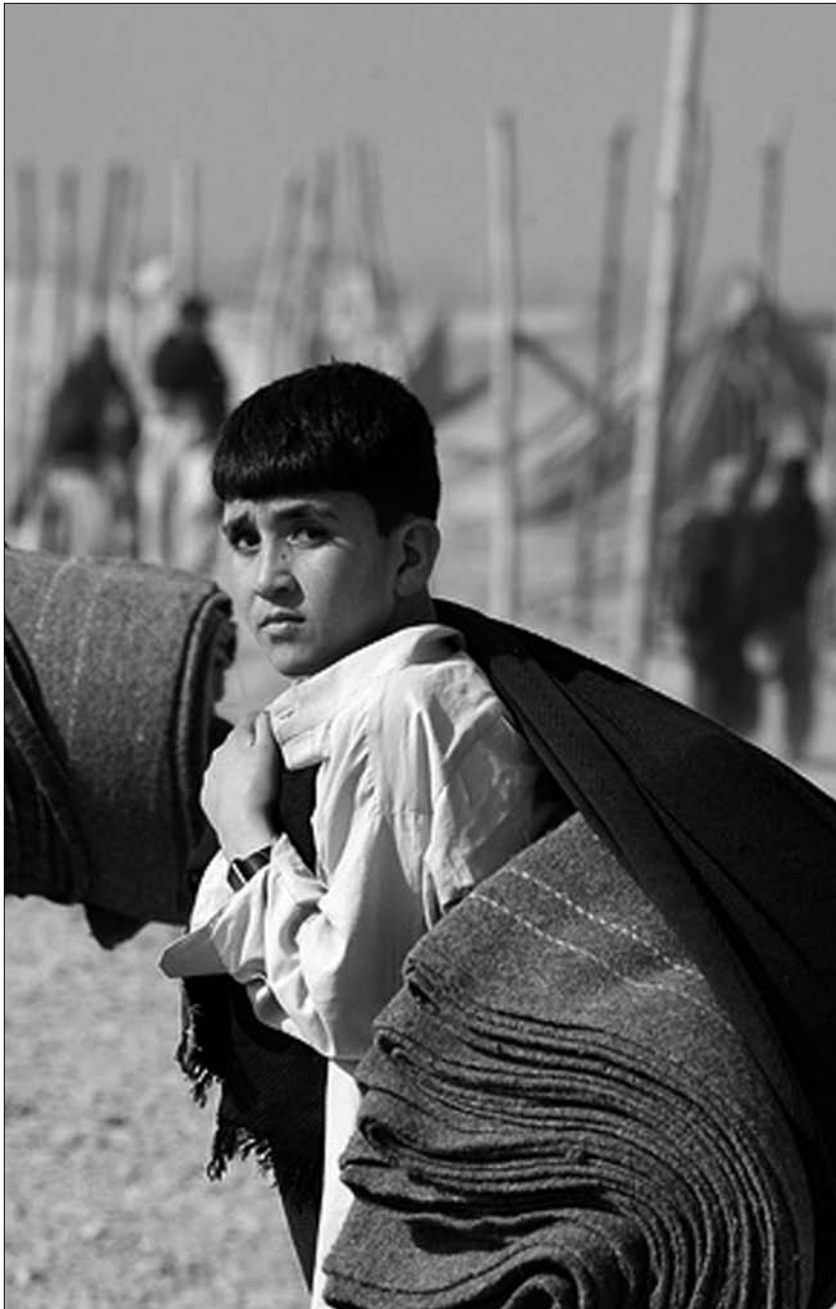
## 붕괴

산골 마을이 날마다 박격포 공격과 포탄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미군 무인폭격기가 무고한 민간인과 투사들을 향해 거의 정기적으로 폭탄을 퍼부었다.

고든 브라운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파키스탄이 탈레반에 맞서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에는 “테러”가 파키스탄인들의 주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을 틀렸다. 파키스탄인 압도 다수에게 주적은 배고픔이다.

UN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서 파키스탄은 175개 나라 중 144위다. 아프리카 나라들을 제외하면 파키스탄보다 더 낮은 나라는 예멘과 아이티뿐이다. 파키스탄 인구의 약 3분의 1인 5천만 명 이상이 절대 빈곤층이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 공격 때문에 난민 문제가 건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정은 훨씬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원 속에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고, 이 때문에 2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겨났다.

UN의 발표를 보면, 와지리스탄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25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났다.

이 난민들은, 올해 초 스와트 계곡에서 군사 공격이 벌어졌을 때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피난민 1백90만 명과 합류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와지리스탄의 전투 지역에 기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그래서 이 인도주의적 비극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서방이 ‘테러와의 전쟁’을 파키스탄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이용해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점차 공허해지고 있다.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파키스탄군에게 자국 민간인을 향해 폭탄 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했다. 자르다리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안 돼 벌써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파키스탄은 경제가 붕괴 직전에 내물리자 국제수지 위기를 피하려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다.

식량과 에너지 부족, 연료 가격 인상, 통화 가치 하락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자르다리가 속한 파키스탄 인민당(PPP)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한다. 소수 특권층 인사들은 부패로 얼룩져 있다.

## 부패

자르다리는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재산이 있으며, 1995년에 영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만 4백35만 파운드(약 8천억 원)를 썼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군사 시설을 겨냥한 잇따른 폭탄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중이 별로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라치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리아즈 아흐메드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만신창이가 됐다. 주요 관공서는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여 있다. 정부의 으리리한 ‘통치’ 기구들이 이제는 무력한 권력의 감옥이 돼 버렸다.”

대중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의 대응책은 탈레반과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적”하는 것이었다고 리아즈는 전한다.

정부는 도시에서 테러 공격이 거듭되면 사람들이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리아즈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의 군사 시설이나 보안경찰 시설이 공격당하면 바로 다음 날 도심에서 폭탄 공격이 벌어진다. 이것은 탈레반과 정부군 간 전쟁을 사실상 탈레반과 파키스탄 국민 간 전쟁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따라서 지금 탈레반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파키스탄 전쟁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키스탄 지배자들은 반(反)탈레반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살인 폭력 집단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장관들은 카라치를 지배하는 정당인 무타히다카우미운동(MQM)의 무장 조직에 무기를 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QM이 그 무기들을 인종 청소에 사용하는데도 말이다.

MQM은 2008년 무사라프 장군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시위대에 총질을 해 낸 강패들이다.

‘테러와의 전쟁’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동맹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눈감아 준다.

와지리스탄에서 추진되는 군사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조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지역 주민들은 파키스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으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오히려 미국과 파키스탄 당국의 잇따른 폭격 때문에, 독립 성향이 강한 부족들은 서방이 표적으로 삼는 탈레반 투사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대개 가난한 농민 출신인 평범한 파키스탄 군인들은 가난한 농민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파키스탄 지배계급은 내분을 겪고 있다.

군 내부의 일부 세력은 “이슬람주의 투사들”에 대한 공격을 당혹스러워 한다. “이슬람주의 투사들”은 파키스탄의 62년 역사 대부분을 통치한 군사 정권에 게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다.

군 내부의 이런 세력은, 1980년대에 무자헤딘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반대해 투쟁할 때 핵심 구실을 한 부족들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할 경우, 특히 그레야한다고 생각한다.

파키스탄으로 확대된 ‘테러와의 전쟁’과 경제 위기 심화가 맞물려 이런 저런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그중에는 1947년에 파키스탄으로 강제 합병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피억압 민족들의 분리 독립 요구도 있다.

와지리스탄의 군사 작전이 실패하면 파키스탄 자체가 쪼개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서방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구 3천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을 지속하려는 서방의 노력은 인구 1억 7천5백만 명의 파키스탄을 전면적인 내전으로 몰아갈 수 있다.

번역 이종길

## 파키스탄 위기의 역사적 배경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제국이 인도 대륙에서 철수하면서 대륙을 분할해 세워졌다. 이 신생 국가는 단일한 “무슬림 국가”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6개 언어 사용 집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저마다 독립 국가를 간절히 원했다. 서파키스탄에서 1천 마일 떨어진 동파키스탄의 벵골인들은 1971년 분리해 방글라데시를 세웠다.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군부—지주—산업자본가들이 지배했다. 파키스탄 역사의 대부분 동안 군부가 통치했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사회주의와

국유화를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1970년대에 잠시 부자들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그러나 부토는 자신을 지지했던 노동계급과 농민을 배신했다. 부토의 인기가 떨어지자 우익 장군 무함마드 지아 울 하크는 부토를 타도했고, 나중에 그를 처형했다.

## 각기 다른 전통

1980년대에 군부와 문민 지배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소련을 몰아내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했다. 파키스탄 지배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전사들

을 후원했고, 미국에 기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소련이 패배하자 199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친파키스탄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며 탈레반을 후원했다.

1999년 페르베즈 무사라프 장군은 나와즈 샤리프 총리,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소탕하려고 전쟁을 벌이자 무사라프는 자신의 동맹 세력인 파슈툰족을 등질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그가 정성들여 건설한 정치 동맹이 불안정해졌다.

무사라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

원하고 정치—사회 개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그의 지배에 도전하는 운동이 성장했다.

나와즈 샤리프의 정당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고(故) 베나지르 부토의 남편)가 이끄는 정당이 연합해 총선에서 승리하자 2008년 8월 무사라프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총선에서 승리한 두 정당은 무사라프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지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하면서 파키스탄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번역 이승민



신간 소개

#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2009년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집회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는 경찰

사진 이미진 기자

“쫓지 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이 최근 발간한 형사 절차 안내서의 제목이다. 갑작스런 연행이나 경찰 소환, 벌금 통고 등을 당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당황하고 위축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쫓지 않고 경찰 수사 등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법기관에게서 공격 받고 있다. 이 정부는 ‘유모차 부대’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이른바 ‘전과자’로 만들었다. 덕분에(?) 민변 등 진보적인 변호사들도 바쁜 사람들이 돼 버렸다. 이 책은 그런 변호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그와 관련한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책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 설명서에 비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

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경찰과 검찰 등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논리와 법 조항들을 설명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사람들은 경찰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잘 모르고 위축돼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쉽게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쫓지 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람생각, 1만 원, 281쪽

필자들이 말하듯 ‘인권’은 “하늘에서 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자들의 전횡에 맞서 싸운 결과물”이다.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도 역시 대중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저항을 하다가 공격 받을 때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들을 제공한다.

아쉬운 점도 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다. 저자들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라는 듯이 말한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고 형을 적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고 정부에 맞서 계속 저항하고 투쟁을 확대시킬 자신감과 사기를 위해 묵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아쉬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수사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비상 구급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민 민주노총 법률원 법규차장

## 진보대연합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토론회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대의원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와 ‘2010 지방선거 대토론회’가 열렸다. 임대환·김지운 중앙위원 후보가 발제했고, 성지현·전진희·정의석 대의원 후보는 토론자로 나섰다.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으로 토론회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임대환 후보는 “연대·연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당 강화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 입장을 취했다. 그는 동시에 연대·연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 연합의 대상은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과도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는 “진보신당의 반성과 사파 없이”는 통합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노동당의 후보 발굴이 늦춰지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김지운 후보는 “한나라당이 싫지만 민주당도 마땅찮아 하는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진보진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울산 북구 선거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가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89퍼센트가 진보정당 통합을 지지했듯이 단결의 열원이 높다.”

김지운 후보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연합은 배제해야 하고, “진보대연합은 진보적인 NGO에서부터 급진좌파까지,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하는, 되도록 광범한 연합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지현 후보도 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명박에 맞서지 않고 김을 빼기 일쑤였고, 지난 정권에서는 한미FTA·비정규직 악법·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10·28 재보선 때 봤던 것처럼, 민주당과의 공조는 오히려 진보적 대안을 찾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진보진영의 힘을 빼는 구실만 할 것[이다].”

전진희 토론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같은 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와 같은 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며 “김지운 패널의 의견을 지지”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강화는 “당원이 확대될 때, 진보세력이 단결될 때 가능한데” 임대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당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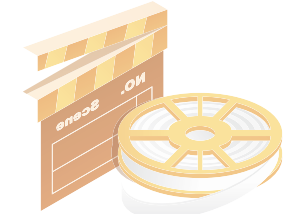
청중 토론에서도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철도 노동자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서울 여대 당원은 철도 파업을 경험하면서 “노동자의 편들이 못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지운 후보가 정리했다. “한나라당만 당선하지 않으면 승리가냐? 민주당이 당선해도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개혁 열망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 확대로 나아갈 발판을 만들 수 있느냐가 승리의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김세란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



사진 김세란 기자



영화평 <아바타>

## 반전과 친환경을 담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 영화

제임스 카메론 감독, 162분

<아바타>는 ‘하마터면’ 명작이 될 뻔한 관覧은 반전·친환경 영화다.

언론에서 떠들어 댄 것처럼 이 영화의 기술적 성취는 실제로 대단하다.

한 행성의 자연환경을 상상력을 통해 완벽하게 창조해 낸 것은 대단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또, 지구에서 파병된 미 해병이 나비족의 주거지를 파괴하는 장면은 베트남 반전 영화인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 해병 헬리콥터가 베트남인들의 주거지를 폭격하는 장면에 버금갈 만한 (가슴 아픈) 장관이다.

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보기 드문 정치적 대담함이다.

<아바타>는 판도라에 파견된 미 해병들이 기업 이익을 위한 용병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해, 이 ‘은하 제국주의’ 군대가 저항에 무릎을 꿇고 처량하게 철군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나는 관객 중 소수가 ‘학’하고 경악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다 - 이 영화의 급진적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다).

막대한 제작비(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홍보비 2억 5천만 달러)를 들인 영화에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있었던 것은 부시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독심과 때때로 대중의 분위기(이 경우에는 부시와 네오콘이 시작한 전쟁에 대한 혐오감)에 편승해 돈을 벌려는 할리우드 영화사의 기회주의가 공교롭게 결합됐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영화가 아쉽게도 진정한 명작이 될 수 없는 것은 극의 구조가 예술적으로 도전적이기보다는 다소 나태한



기존 할리우드 영화의 틀을 고스란히 따왔기 때문이다.

<아바타>의 ‘악당’ 중에는 민주주의나 문명 간 교류를 들먹이며 전쟁의 진정한 목적을 숨기려 하는 부시 시대의 이데올로그들이나 오바마 같은 ‘여우’가 없다.

‘좋은 편’인 나비족이 사는 세계는 완벽하게 평등하고 자연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어 후세인이거나 탈레반 같은 존재나, 심각한 내부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주인공과 관객이 누구와 일체감을 느껴야 할지는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이분법적 구도 속에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는 3D 안경을 끼고 대형 상영관을 꼭 채운 수백 명의 관객들과 함께 손에 땀을 쥐고 억압 받는 사람들의 저항의 승리와 제국주의 군대의 패배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한다.

김용욱 기자 ohatong@left21.com

공무원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 요구에 응해서 공무원노조가 12월 21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설립 신고 서마져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애당초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 줄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현재 ‘신고제’인 노조설립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민주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투쟁 끝에 따낸 소중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이어 천막·컨테이너 등 임시 사무실까지 폐쇄하기 시작했다.

안산시에서는 다른 날도 아닌 크리스마스 새벽 안산시지부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를 폐쇄했다.

더 나아가 이명박은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국민의 65퍼센트 이상이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4대강 삼정를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우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2010년에도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임금 동결로도 모자라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협박은 임금의 일부인 각종 수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바로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임시 사무실 폐쇄, 봉급 지급 유보 등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활동가



사진 박천석 기자



#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소통 : ①막히지 않고서 통합 ②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합 (민중 엿센스 국어사전)

소통이 한국 사회의 화두다. 언론과 각종 논평은 끊임없이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 학교나 몇몇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소통”을 내건 후보가 당선하기도 했다.

이토록 소통이 화두가 된 이유는 MB 시대가 불통과 먹통 시대이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0일 광화문에 여청수가 세운 거대한 콘테이너 바리케이드, 일명 “명박산성”은 불통 MB의 상징이었다. MB의 안하무인 독주 정치가 소통을 열망하게 하고 있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이 열망하는 소통에는 민주주의 염원이 반영돼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먹통 MB를 폭로하는 것은 정당할 뿐더러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과거에 비해 더한층 불통 정부이긴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도 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은 평화를 바라는 한국인들과 불통하고, 조지 부시와 소통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고, 대자본가들과 소통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우파들과 소통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좌파를 마녀사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다. 2004년 여름, 노무현은 살고 싶다며 파병하지 말라던 김선일의 절규를 무시하고 조지 부시와 소통했다. 한 청년은 불통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한미FTA 체결, 국가보안법 개폐 사기극,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대량 구속, 노무현도 철저히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과는 불통했다.

**지배자들의 이런 불통은 근본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와 관계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계급 적 대와 계급 지배에 근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급 간 소통은 근본에서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계급투쟁에 장애가

된다.

간혹 지배계급이 직접 나서 피억압자 운동과 ‘소통’ 하는 경우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든 ‘노사정위원회’ 나 최근 전교조 지도부가 불필요하게 참석한 교원평가 ‘6자 협의체’,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8인 협의회’ 등.

이는 지배계급이 질질 시간을 끌면서 우리 편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고 김을 빼기 위한 수법이다. 대화나 협상은 대립물들의 투쟁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지, 투쟁의 목적이 되거나 투쟁이 그것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촛불 항쟁이 마지막 불꽃을 사르던 2008년 7월 초 광우병대책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비밀리에 ‘소통’ 하려다 공개되는 불쌍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촛불의 악몽을 끝내고 싶어 하던 청와대와 운동을 연착륙시키려던 일부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시도가 낳은 해프닝이었다. 비밀 회동 추진은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지배계급과의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한겨레>, <경향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MB를 비판하며 소통을 말할 때, 그것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고, 그 통로와 방법은 흔히 국회를 뜻한다.

소통하지 않는 MB와 그에 맞선 투쟁을 모두 겨냥한 양날의 검인 셈이다.

2008년 촛불 항쟁, 용산 참사 항의 투쟁,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들이 강조하는 소통이란 기껏해야 투쟁의 수증기에 가느다란 빨대를 꽂아 국회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이 열망하고 쟁취해야 할 민주주의에 한참 못 미친다.

##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그렇다면 어떤 소통이 필요한가? 우리 계급 안

에서 소통해야 한다. 저 불통 정부와 체제에 맞서 우리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거리의 정치 시위가 노동자 파업과 소통해야 하고, 학생들의 투쟁이 노동자 투쟁과 소통해야 한다. 한국 노동자가 이주노동자와 소통해야 하고, 한국의 투쟁이 국제적 투쟁과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계급과 피억압자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집단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어깨걸고 투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공동전선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프트21> 같은 신문이 필요하다. 신문은 사회주의자들과 피억압자들과 노동계급의 소통의 장이고 서로를 연결하고 고무하고, 투쟁을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불통 좌파 — 공동전선에 종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대중과 소통을 무시하는 — 에게는 미래가 없다.

글의 제목에서 던진 물음에 답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나는 MB와 소통하지 않는다. 나는 이 체제의 지배계급과 소통하지 않는다. 나는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소통을 의심하며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과 소통한다. 그리고 이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운영하는 체제를 위해 **투쟁하고 또 소통**한다.

김강한

필자는 철들기 시작하면서 지긋지긋 자본주의 체제와 권력을 뼈뼋히게 보면서 그것에 맞서 싸워 왔다. 다양한 운동의 조직자로 활동했고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체제에 저항하는 삶을 살고 있다.

## 오늘의 급진 사상이 ③

# 어떤 세력이 지젝이 말한 ‘적대’ 를 해결할 수 있는가?

조너선 몬더

이번 마지막 칼럼에서는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과 한계를 살펴본다.

슬라보예 지젝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의 방식과는 다르다.

지젝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중이 꼭 찬 강연장에서 연설하고, <라디오 4> ‘투데이’ 프로그래م[영국 BBC의 방송 채널]에 나와 인터뷰하고, 자신의 사상을 다룬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 등 가장 대중적인 급진 지식인이라 부를 만하다.

지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농담, 대중문화 이야기를 혼합해 오늘날의 굼직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놀라운 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지젝이 비타협적·독창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학계에서 득세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도전한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다.

미국 노동계급의 상당수가 영향을 받는 종교적 보수주의를 예로 들어 보자. 자유주의자들은 종교적 보수주의를 무지몽매함이나, 어쩌면 게으름에서 비롯하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신념은 모두 [저마다] 특수한 담론이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지젝은 이런 신념이 고통과 불안에서 비롯한 현실적 근심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지젝은 이런 신념을 전이된 형태의 계급의식, 즉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지젝은 정신분석학의 개념으로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의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자유주

의자들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내세우는 ‘계급은 끝났다’ 는 주장과는 거리를 둔다.

지젝이 보기에 계급투쟁은 사회 현실이 조화로운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런 견해에서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사상적 영향이 드러난다.

라캉은 무의식의 상징적 질서가 인간 존재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서가 상징적 ‘현실’을 만들어 내 사회를 유지시키지만, 이 질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불완전하다고 한다.

라캉은 무의식이 상징화의 영역을 넘어서는 지점들이 있다고 본다. 이 지점들이 ‘실재계’다. [라캉은 현실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상상계는 이미지의 영역, 상징계는 언어로 의미가 창출되는 영역, 실재계는 현실 바깥이 아니라 현실 내부의 영역이지만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젝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투쟁을 상징적 ‘현실’ 속의 ‘실재계’와 비슷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처럼 다소 모호한 개념 탓에 지젝은 모종의 사회적 이상 현상이나 저항을 모두 계급투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젝은 최근 어떤 글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몇몇 핵심 ‘적대’로 생태적 재앙, 지적재산권, 유전공학,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아파트헤이트”를 거론한 바 있다.

지젝은 “배제된 사람들”, 특히 남반구의 거대한 슬럼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혁명적 주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는 지젝이 강조하는 쟁점이나 집단이 아니다. 그가 노동계급(자본이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계급)을 무시한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지젝이 말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이해관계와 능력이 있는 사회 세력은 누구인가?

지젝은 실재계의 표현인 사회적 적대를 주목하기 때문에 레닌에게 흥미를 느끼는 듯하다. 지젝은 레닌을 이런 적대의 화신으로 묘사하면서, 혁명적 전략·전술가의 대가인 레닌이 “사회를 무자비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여겼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레닌주의를 현실의 노동계급(레닌이 투쟁의 능동적 주체로 본)과 전혀 상관없는 권력투쟁으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젝은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다르게 보면서도 그 둘의 본질적 차이를 늘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하는 것이다.

지젝은 1920년대 말 러시아의 강제집산화가 1917년 혁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혁명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레닌에게 혁명 전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런 일을 하려고 노동자들 속에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세계 변혁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현실의 노동자 투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풍부해질 수 있다.

오직 혁명정당을 통해서만 이런 일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급진 이론은 여전히 칼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한다.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번역 이종길

## 논설

# MB의 부관 노릇을 하는 민주당, 진보의 친구가 아니다

2009년 연말 4대강과 예산안, 노조법 개악, 세종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을 밀린 숙제하듯이 밀어붙이던 이명박의 시도는 곳곳에서 반발과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이명박은 몇 가지를 다시 미뤄야 했다. 세종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은 2010년 초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 정권의 상징인 4대강 삽질과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촛촛미 짠 예산안, 고통 전가에 맞설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 두기 위한 노조법 개악은 멈추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 포기 대국민 선언’을 해 반발을 무마하며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대운하를 4대강 정비라고 이름만 바꿔 추진해 온 자들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이 밖에도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트콤에서 “뽕꾸뽕꾸”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뽕꾸뽕꾸”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고 “뽕꾸뽕꾸” 같은 정책과 정권에 대한 불만이 사라진다는 것인가?

그러기엔 “뽕꾸뽕꾸”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 수능 6등급 이상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생활지원비(그것도 고작 1년에 2백만 원)를 주겠다는 소식, 비리의 제왕인 재벌 총수 이견회를 사면복권한다는 소식 등이 그렇다.

무엇보다 녹색 성장 여저꾸 하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 발전소를 수출하게 됐다고 기뻐 날뛰는 모습은 저절로 입에서 막말이 나오게 한다. 핵폐기물과 방사능 누출로 엄청난 재앙을 낳을 수 있는 핵 발전소의 수출은 재앙의 수출이다. 핵 발전과 핵무기에 만리장성이 없을진대 이것은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부추기는 꼴이다.

## 재앙의 수출

최근 이 정부가 ‘토착 비리 척결’을 꺼낸 의도도 순수할 리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패한 하급 권력자들이 정권에 충성하도록 다그치려는 의도와 경쟁 세력인 민주당의 비리 약점을 꼬집어내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 점에서 정세균, 한명숙,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뒤엎힌 관계가 의심쩍긴 하지만 이명박의 의도와 위선이 더 괴씸하다.

이명박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명박의 도공동 땅 의혹과 한상률 게이트부터 파헤쳐야 마땅하다.

이 부패한 정부의 4대강 삽질과 서민 고통 전가 맞춤형 예산안은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전면 삭감에서 부분 삭감으로 후퇴하더니 곧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의 분리 처리로 후퇴했다.

노조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 처리를 반대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는 한나라당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수정안을 들고 나와 민주노총에게 타협을 종용했다.

그 점에서 정부 주도의 ‘6자 회의’에 들어가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았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다시 추미애 주도의 ‘8인 연석회의’에 들어가는 식으로 협상에 연연한 것은 아쉽다.

따라서 민주당과 친노신당, 진보정당 등이 모두 “연대해 브레이크와 핸들 없이 폭주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친노신당 유시민의 주장은 틀렸다.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금 진보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흔한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보진영은 다가 올 투쟁과 선거에서 단결과 통합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이 “거품으로 썩어 가도 누군가가 나를 던고 올라서 더 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며 민주당을 위한 희생을 거론한 것은 틀렸다. 이명박과 아합하며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민주당을 위해 진보진영이 거름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2010년 진보진영은 진보의 통합과 단결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 레프트21

# 코펜하겐 — 전 세계적 기후정의 운동의 탄생

조너선 닐 '기후변화반대운동' 활동가, 한글로 번역된 저서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두 개의 미국》(책갈피),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공저, 책갈피) 등이 있다.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지구적 운동이 탄생했다. 첫째 증거는 토요일[2009년 12월 12일] 시위 참가자의 규모다. 경찰 추산으로도 10만 명이 토요일 시위에 참가했다.

엄청나게 추웠지만 시위 행렬은 엄청나게 길고 시끄럽고 활력이 넘쳤다. 덴마크인이 절반, 외국인이 절반이었다. 나는 대열 앞뒤를 이동하며 관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 관련 구호를 열심히 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아무도 10만 명이나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은 지긋지긋하게 가장 큰 기후 변화 시위를 보았다. 우리는 새로운 전 세계적 운동이 탄생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후정의네트워크'와 '기후정의행동'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많은 이가 NGO 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NGO 캠페인의 일부로서 코펜하겐에 왔다. 그중에 2만 5천 명이 정당들이 회담하는 벨라 센터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정부의 NGO 길들이기 정책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구의벗, 비아캄파시나, 주빌리사우스(제3세계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기독교 네트워크), 남반구조점, 아팍 프랑스 등 급진 NGO들이 기후정의네트워크라는 느슨한 연합체로 결집했다.

회담 둘째 날부터 이들의 급진주의는 다른 NGO 집단에까지 확산됐다. 예컨대, 아프리카 NGO 참가단은 회담장 홀에서 '우리는 가만히 죽지 않을 것이다'하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 외에도 작은 행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자 경비들은 방문자들을 검문하고 일부 사람들의 회담장 입장을 불허했다.

회담장 밖의 기후정의행동은 [회담장 안의] 기후정의네트워크와 보조를 맞춰 움직였다. 기후정의행동은 영국의 기후캠프가 참가하는 직접 행동 조직 연합이다.

그들은 지난 주 수요일[2009년 12월 16일] 집중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했다. 기후정의행동은 벨라 센터의 경찰 저지선까지 행진해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기후정의네트워크는 벨라 센터에서 집단 퇴장을 시도할 것이었다.

아마도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틀림없는 회담장 운영 당국은 저항에 점점 화가 났고 그것의 파장을 우려했다. 토요일 시위는 매우 컸고 회담장 내부 시위는



누구도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지 상상하지 못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오바마 도착에 맞춰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탄압의 끈을 옥죄기 시작했다.

덴마크 경찰은 토요일부터 2천 명가량을 체포했고, 그들을 기소사유도 없이 12시간 동안 구금했다. 경찰은 또한 기후정의행동의 주요 지도자들을 체포, 기소하고 보석신청을 금지했다.

연합 시위 날이 다가오자, 유엔은 회담의 마지막 4일 동안 NGO들에게 통행증의 80퍼센트를 반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미국 노조 대표단이 회담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

연합 시위 전날 기후정의네트워크는 회담장 안에서 기후정의행동은 회담장 밖에서 행동을 벌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은 모임에서 시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지구의벗 인터내셔널 대표단은 그들의 입장이 전면 금지됐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Tkk, Tkk, Tkk(그린피스, 옥스팜,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포함된 연합)도 동일한 통보를 받았다.

읽 / 어 / 볼 / 만 / 한 / 책



## 추미애가 날치기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12월 30일 국회 환노위원장 추미애가 노조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추명박'은 민주당 의원조차 못 들어 오게 문을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앉혀 놓고 날치기 통과에 운문을 바쳤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악안은 지난 12월 4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총이 아합해서 만든 노조법 개악안과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2월 4일 이런 내용을 아합한 후

한국노총 지도부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노사정 아합 무효·지도부 사퇴' 목소리가 커졌고, 항의 행동도 이어졌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경고하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에게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며 투쟁의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끌며 커지는 반발의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다.

추미애는 '연내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노동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압박하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었다. 추미애의 본색은 금세 드러났다. "추미애 중재안은 12월 4일 노사정 아합과 그에 기초한 한나라당안을 기본 뼈대로 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2월 4일 노사정 아합이 낳은 반발의 열기를 이용해 투쟁을 확대하지는 않고 협상에 연연하다가 투쟁의 감을 빼고 말았다.

결국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담만 할 일은 아니다. 당장 새해부터 노조법의 시행을 두고 곳곳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도 낙담하지 말고 이명박의 노조 탄압과 공격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해도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그동안 쌓아온 투쟁력과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박설 님 함께 노동조합팀, 전지윤 기자

## 새로 나왔습니다!!

다함께의 이론지

### 마르크스21

4호 (2009년 겨울호)



특집: 최근의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_ 조셉 추나라  
이윤율과 오늘날의 세계 \_ 크리스 하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_ 김하영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_ 정병호  
쌍용차 대인과 공기업화 논쟁 \_ 정종남  
경제 위기 시기 복지국가 전략의 의미와 한계 \_ 장호중  
다윈과 진화론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트로츠키 전기 작가  
아이작 도이저 \_ 닐 데이비슨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에서 배우기

서방 공산당의 궤적 \_ 크리스 뱌버리

가격 15,000원

구독 신청 문의

Tel 02-2271-2395 / Fax 02-2271-2396

##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 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맹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해학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대전 |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